

제309회 국회  
(임시회)

#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7 호

국회 사무처

2012년7월20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

1. 경제에 관한 질문
2. 국무총리(김황식) 해임건의안

## 부의된 안건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1
  1. 경제에 관한 질문 ..... 1
  2. 국무총리(김황식) 해임건의안(박지원 의원 외 126인 발의) ..... 89
- 의사진행의 건 ..... 89
  2. 국무총리(김황식) 해임건의안(박지원 의원 외 126인 발의)(계속) ..... 91

(14시04분 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의장 강창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8일 10시에 국무총리(김황식)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국회법이 정한 법정처리시한은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의장은 교섭단체 간 이미 합의된 오늘 대정부질문이 모두 끝난 후,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추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0일 임기가 만료된 4인의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아직 처리되지 못하여 사법부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도 교섭단체 간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경제에 관한 질문

(14시05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진갑 출신의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의원**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부산진구갑 출신 나성린 의원입니다. 질문 한번 참 하기 힘드네요.

오늘 아침에 제 지역구 주민들 올라왔다가 도로 다 내려갔습니다, 질문 못 듣고. “19대 국회, 18대 국회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욕을 하며 내려갔는데,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대정부질문을 제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발 재정 위기가 다시 발생해서 우리 수출과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락하는 등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민·빈곤층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적 약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을 점검해 보고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유럽 재정 위기 극복과 경제민주화 실

천 과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외적 위기 상황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지난해 하반기부터 위기가 다시 재부각되어서 금년도 1/4분기에는 다소 위기가 진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5월 초 그리스 총선을 계기로 해서 다시 위기가 재부각되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유로정상회의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방안의 구체성과 일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전문가들은 적어도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위기가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제가 최근의 남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을 보니까……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스페인,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업률이 20%를 넘어서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저는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남유럽 국가들에서 우리 경제가 직접적으로 익스포저(exposure)되어 있는 부분은 크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유럽 국가들 외에도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등 중심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들 경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유럽의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유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남미라든지, 유럽 수출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중국 등도 영향을 받게 되고, 따라서 간접적으로 중국 등을 통한 위험의 전이 경로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성린 의원** 남유럽 경제 위기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은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순식간에 증폭될까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런데 저는 그 우려가 '위기가 수면하에 잠복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궁극적으로 유로존 단일통화가 결국 붕괴하고 말 것이다' 하는 극단적인 견해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취해야 할 행동 등을 담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정교하게 다듬고, 그중에 일부는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나성린 의원** 저도 유로화가 붕괴되지 않는 한 급박스러운 어떤 위기가 올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그리스 구제금융이 충분치 않지요? 그리고 트로이카와의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이 실패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실패라고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와 그리스 사이에 구제금융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협상이 다시 재개되어 진행 중입니다.

**○나성린 의원**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거기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와, 지난번 유로정상회의에서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 규모를 결정한 것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습니다.

참고로 IMF에서 스페인의 구제금융 규모를 추산한 결과는 10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사정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전개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성린 의원** 지금 이태리 구제금융 가능성도 있고, 이 구제금융을 집행해야 될 기구인 ESM이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이태리도……

**○나성린 의원**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ESM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이태리도 어제 국채 발행에 성공했는데 국채 이자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유로존의 문화적·역사적인

맥락, 수백 년 동안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했던 커다란 대의명분에 의한 출범의 의의 등을 되짚어 보면 중심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이태리나 스페인 등의 어려움까지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시각이 또 우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이태리는 그리스와 달리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좀 우세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저도 비슷한 견해인데, 저번에 유로 차원에서 1200억 유로 재정 확대하기로 했지요?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그것은 유로존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 GDP의 1%에 해당하는, 지금 말씀하신 1200억 유로의 성장 촉진 패키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성린 의원** EU 차원에서는 스스로 구제금융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외 국가는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중국, 일본 또 기타 개도국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금년 1/4분기 동향에서는 중국 등에서 유로존의 어려운 나라들의 국채를 매입하는 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한 두 달 전에 중국이 그런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고, 직접적으로 유로존 국가들을 다른 제3권역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사태까지 염두에 둔 IMF의 구제금융 재원을 확충하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456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로존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에는 IMF의 재원 증액분 456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이 유로존을 구하기 위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성린 의원** 중국이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중국도……

**○나성린 의원** 경제성장률이 지금 8% 이하로 하락하고 있던데?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2/4분기에 7.6%,

1/4분기에 8.1%가 나왔습니다만 7월 16일 날 IMF에서 발표한 전망치를 보면 8.2%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중국이 7% 후반대 성장을 했는데 중국은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과 또 금리인하 여력 등이 충분하고 올해 또 10월에 정권 교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경제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최선을 다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가동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이어 인하하는 등의 그런 발 빠른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분기에 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중국을 제외한 기타 개도국들이 그래도 우리 수출을 지탱해 줬는데, 다른 개도국들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아시아 쪽으로는 지금 두 자릿수로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중남미는 최근에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 남유럽 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쪽은 저희들이 좀더, 종래의 브라질, 멕시코 등 외에도 다른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중동 쪽은 고유가로 인해서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중동 쪽 수출도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각종 인프라 발주에서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서 많이 중복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들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조정이 끝나고 하반기부터 인프라 투자 발주가 시작되면 우리 해외건설 수주도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기타 개도국들은 아직까지 견디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세계경제 위기에 대응한 대외안전망은 어떻게 잘 구축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대외안전망에 관해서는 언제나 100%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정부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대외건전성은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외채에서 단기의 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33% 정도로 절반 수준에서 크게 낮아졌고 외환보유고도 31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그밖에 우리 금융기관들의 외화차입선도 아주 다양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2008년이나 또 1997년 상황과

비교를 해 보면 괄목상대할 정도로 대외건전성 측면에서는 나아졌기 때문에 국제신용평가사들도 그 점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2010년에 저희 18대 국회도 동의해서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3종 세트를 우리가 도입한 적이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나성린 의원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3종 세트를 도입을 했고, 그 3종 세트 덕분에 방금 말씀드린 대외건전성이 크게 향상이 되고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세히 지표들을 보시면 우리 환율의 변동성은 2008년 같은 경우에 경쟁국보다 2~3배 정도까지 변동성이 높았는데 지금은 경쟁국들에 비해서 우리 환율의 변동성이 오히려 더 낮은, 변동성이 가장 작은 화폐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우리 대외건전성이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은 지금 어떤 나라하고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전체적으로 한 1500~1600 정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성린 의원 중국하고 일본하고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중국하고 저희들이 위안화로 되어 있습니다만 달러로 환산했을 경우에 550달러 정도 되고, 일본하고 700억 달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ASEAN+3에서 치앙마이 다자화협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1200억 달러 가운데 지금 192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달이 되면 그게 2배로 늘어나서 2400억 달러 가운데 384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성린 의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체결 국가를 더 늘린다든지 액수를 늘린다든지 할 필요는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아직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사태가 정말 긴박해서 외화를 차입하기 어려운 여건이 온다면 종래에 했던 대로 미국 등과의 통화스와프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큰 핵무기라 할까요, 이런 것을 지금 이런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칼을 써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러니까 유로존이 붕괴하지 않는 한 급박한 경제위기가 당장 재정위기로 인해서 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 정부로서는 유로 붕괴에 대비해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잘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그렇게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러면 대내적 위기 상황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제성장률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러는데……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을 조금 더 부연을 해 드리면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상저하고’의 기대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하고’의 시점이 늦어지고 또 ‘하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공격적인 회복세가 아닌 밋밋한 회복세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른바 L자형이라고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국제금융기구—IMF나 ADB나—또 우리 국내 연구소들이나 또는 IB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유로존 쪽의 불확실성이 커서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성린 의원 제가 볼 때 ‘상저하고’에서 ‘하고’의 전망은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세계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좀 이따가 제가 국내의 위기극복 상황을 점검하겠지만 그렇게 큰 희망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수립을 할 때 ‘하고’에 대한 전망은 좀 포기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중저하고’ 정도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나성린 의원 제가 볼 때는 전년에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3.3%로 인하되었을 때만 해도 그 전망이 의미가 있었는데 최근에 3%로 더 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나성린 의원 제가 볼 때는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국토해양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하반기 경제가 살아나려면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금 거래가 연초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예년 평균에 대비해서 한 30% 이상 줄어든 상태이고, 수도권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방은 상승세가 좀 꺾이고 있고, 전·월세 시장은 지난해 10월 하반기부터 좀 안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성린 의원** 수도권의 경우에 2008년 고점 대비해 가지고 시가총액이 150조 원 이상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 5.7% 정도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과천 분당 일산 용인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15%에서 한 22%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게 평균 가격이지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시장 전망을 소비자들이 그렇게 밝게 보지 않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의원**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가격 하락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거래가 많이 위축되면서 거래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업종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체로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나성린 의원** 그것도 걱정이지만 제가 볼 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부동산 자산 가치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 일본식 복합불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거시경제 여건이나 또 주택시장의 여건이 일본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래도 성장률이 4%대에 가까이 유지가 되어 왔고, 일본은 90년에 복합불황이 시작할 때 성장률이 한 1% 정도 됐고요. 그리고 주택 보급률도

일본은 한 110%, 우리는 100% 가까이밖에 안 되고, 그리고 LTV의 경우에도 일본은 120%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우리는 지금 평균적으로 49% 정도 되고 60% 정도가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불황 그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사이클상으로 그동안에, 2000년대 초반에 급등기를 거쳤기 때문에 조정해 가는 그런 국면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성린 의원** 일본식의 복합불황은 아니더라도 최근 스페인이라든지 아일랜드, 미국 이 정도의 장기적인 불황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다른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동산만 보면 지방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지금 고점에 와 있습니다, 요즘 상승세가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수도권은 지방하고 다른 여러 가지 규제 장치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성린 의원**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대책이 17차례 나왔지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런데 왜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이유를 뭐로 보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난해 말에 사실 좀 살아나다가 또 유럽 쪽의 영향을 받고 그런 게 있고, 국내적으로도 경기가 대외 경기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썩 좋지 않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분위기가 좀 위축된 것, 구매의욕이 좀 떨어진 것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대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법률 개정을 요하는 정책들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나성린 의원** 그 말은 국회가 책임 있다 이런 이야기이네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하여튼 저희가 그러한 법률들이 조기에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안을 최대한 조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시급한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켜 주지 않은 책임도 있습니다, 분명히.

특히 야당에서 반대를 많이 한 법안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제가 볼 때는 짚끔짚끔했다, 한번 할 때 화끈하게 해야 되는데 17차례에 걸쳐서 짚끔짚끔 했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반감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대책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쓸 건 거의 다 썼는데 남아 있는 대책이 무엇 무엇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양도세 중과 폐지 같은 법률 개정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경우에 더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나성린 의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저희 당도 당론으로 했는데 이게 거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이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나성린 의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게 시장이 어려울 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부문별로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주택의 출시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나성린 의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도 기존 주택을 못 팔면 못 옮기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것은 거래 활성화와 관계없고 사실 이것은 ‘주택 규제의 상징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런 의미도 있고요. 지금 우리 주택의 질적 수준을 보면 아직도 신규 주택 분양 받아서 입주하면서 인테리어를 개조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건설 관련 산업은 물론 활성화되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래서 그런 주택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나아질 수 있겠지요. 시장 분위기도 아무래도 좋아지는 쪽으로 작용할……

**○나성린 의원** 시장 분위기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는 금년까지 중과 안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폐지가 안 되면 중과가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폐지가 되면 아무래도 구입하는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도 중과 부담을 안 갖게 되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나성린 의원** 저는 이것은 반드시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동의합니다.

**○나성린 의원** 하여튼 이번에도 우리 당이 당정 협의에서 부자감세가 두려워 가지고 또 하지 못했는데 사실 지난 18대에서 제가 두 번 이것을 법을 내서 다 통과시켰어요. 올해 말에 일몰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DTI 신축적 적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DTI는 그 자체만 보면 그동안에 DTI를 강화했을 때 완화했을 때 또 경험 이런 것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계의 부채가 굉장히 중요한 또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나성린 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재개발·뉴타운 지역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뉴타운이 68곳인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재개발까지 합해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정비구역은 전체가 한 2173곳인가 돼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나성린 의원** 이게 빨리 활성화돼야지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 말입니다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나서도 5년 10년이 지나도 시공사들이 지금 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부동산 시장하고도 이제 밀접히 관련이 돼 있는데 지난해지요, 지난해 18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출구도 마련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 지원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저히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출구전략 쪽으로 가도록 하고 사업성이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지역들은 재정 지원을 확대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성린 의원** 그것은 좋은 방안인데 제가 볼 때는 관리처분 인가 후에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나도 시공사들이 시공하지 않을 경우는 매몰비용 다 포기하고 사업권을 포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법 입법할 생각 없으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글썄, 이게 강제로 포기시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나성린 의원** 아니, 주민들이 지금 워낙 어려워하니까. 주민들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집수리도 못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도록은 돼 있는데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들어가시고 금융위원장 나와 주십시오.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고 그러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저희 가계 부채 문제가 외환 위기 이후에 장기간 빠른 속도로 늘어왔고 또 그 구조도 지금 나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가계 부채가 전반적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현재로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해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의 LTV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실 흡수 능력이라든지 그동안의 저희 주택가격 변동 추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현재로서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취했지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시지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그동안 지난해 연초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계 부채 대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DTI 규제를 원상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제2금융권의 버블 요인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서민금융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적인 조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한 후에 지난해 6월 29일 날 저희가 범정부적으로 4대 부분에 걸친 이런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첫 번째가 충유동성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두 번째가 좋은 일자리를 계속 창출을 해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앞으로 이런 가계 부채 대책을 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서민가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적절한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 결과로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주춤해진 것은 사실이고 대출 구조도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풍선효과라고 들어보셨지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나성린 의원**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지금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에서 또 이렇게 그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금융회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유동성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가 6·29 대책을 할 때 그 이전에 이런 제2금융권의 버블현상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을 해 왔고 그리고 또 금년 2월에 저희가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 보완 대책을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비은행권 대출 증가세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비은행권 가계 부채가 6조 1000억 원 늘었는데 금년에는 그 규모가 2조 30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성린 의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

계 부채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일종의 관리 대책이지요.

제가 볼 때 가계 부채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 회복이 되지 않는 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도기적으로 서민금융 대책과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경기회복 때까지 고통을 최소화하고 희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에도 4월 15일 서민들에 대한 금융기반 강화 대책을 추진을 했고 금년 3월 30일에도 그런 대책을 또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어제 또 저희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금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서민금융 대책을 여러 가지 했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몇 가지만 한번 예시를 해 보시지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우선 어제 저희가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미소금융이 있습니다. 이 미소금융은 대출한도도 늘렸고 그리고 청년·대학생들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요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렸고 그리고……

○**나성린 의원**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지요, 1000억 원을?

○**금융위원장 김석동** 미소금융은 저희가 휴면예금……

○**나성린 의원** 원래 휴면예금……

○**금융위원장 김석동** 이런 데서부터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이 또 기부하는 돈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햇살론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저희가 제2금융권 등에서 재원을 조성…… 햇살론의 경우에도 재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대폭 상향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연간 공급 규모도 당초 5000억 원에서 한 7000억 정도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희망홀씨라고 해서 우리 은행권에서 공급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1조 한 5000억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2조 원까

지 늘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가 고금리 채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때문에 KAMCO에서 바뀔드림론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는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고, 그 외에도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해서 신용 회복도 하고 동시에 급전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프리워크아웃제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견이 있습니까? 다 해소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그것 전혀 정부 안에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성린 의원** 이견이 없었어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그 프리워크아웃은, 원래 90일이 지나야 연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월부터 90일까지 연체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미 프리워크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은행이……

○**나성린 의원** 내년 4월에 종료되잖아요, 그렇지요? 내년 4월 종료되지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종료되는데 그것을 이번 대책에서 어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기간을 아주 제한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개별 금융회사에서도 은행 등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사전적인 채무 재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나성린 의원** 생애최초주택대출이라고 있었지요, 젊은 사람들, 집 없는 분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나성린 의원** 그게 다 자금이 고갈됐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그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저희 부처에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해 가면서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수많은 서민금융 대책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서민을 위해서 뭘 해 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이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석동** 제가 잠깐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

해서 참 홍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나들목'이라는 초대형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다 망라를 했고 개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의 신용 상태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세세하게 다 안내받을 수 있는 아주 초대형 포털을 이번에 출범시켰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요.

저축은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1·2차 퇴출 다 해결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20개 저축은행 자산 비중으로는 40%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괄해서 구조조정하는 것은 이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성린 의원 이번에 3차 퇴출 어떻게 좀 지원해야지요? 얼마나 돈이 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이번에 돈이 드는 것이 4개 사인데요. 4개 사 저축은행 구조조정하는 데 약 6조 3000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자회사 포함한 겁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자회사는 지금 정상적으로 경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나성린 의원 6조 원 어디서 마련하지요, 돈을?

○금융위원장 김석동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지난해에 법을 개정을 해서 마련을 했고……

○나성린 의원 그 돈으로 충분합니까, 작년 특별계정 돈으로?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지난해에 저희가 16개 저축은행 구조조정 했는데 그때 필요한 소요재원이 약 16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련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15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개 저축은행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약 6조 남짓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약 6조 내지 7조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특별계정을 기존에 15년이었는데 한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어제 오늘 CD금리 담합에 대한 소문이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말이에요. 지금 이 금리를 보니까 4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CD금리가 계속 고정되어 있어요, 다른 금리는 다 내려가고 있는데. 담합의 의혹이 있는 것이지요? 어때요,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합의 의혹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단기지표금리라는 것이 시장과 산업에 아주 영향을 크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도 저희 실무선에서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이 단기지표금리를 어떻게 이것이 적절한지 또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건지, 보완하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건지 또 대체수단은 있는 건지 하는 등등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나성린 의원 그러니까 대안적인 지표를 마련하기 전에 CD금리의 결정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융위원장 김석동 CD금리는 본래는 유통금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발행을 하게 되면 그것부터 같이 감안을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 증권회사에서 그 금리를 제시를 하면 그중에 가장 높은 것하고 가장 낮은 것 두 개를 사상하고……

○나성린 의원 7개의 시중은행 금리……

○금융위원장 김석동 나머지를 평균해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담합을 하게 되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서 할 텐데 담합으로 인해서 이익 보는 측이 어느 측들입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글썽요, 저는 특별히 담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고 있지 않고……

○나성린 의원 아니, 만약에 담합을 하면 이익 보는 측이 어디냐 이거지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글썽요, 저는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금융에서는 금리가 자유화되어 있고 자기들이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는 마당에 특별히 어떤 이런 시장지표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까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

용은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나성린 의원** 시중은행들은 금리가 높으면 물론 이익을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익을 보게 되는 거고 지금 보면 4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소지가 보이는 것이지요, 물론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금융위원장 김석동** 그 부분 때문에 지금 CD 금리를 단기지표금리로 계속 유용하게 쓸 것이냐 하는 논의가 지금 시장과 우리 당국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성린 의원** 그래요, 감독당국이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구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잘 알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들어가시고, 기재부장관 다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출 부진과 더불어서 내수가 계속 부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나성린 의원**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고 있습니까, 기재부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내수 부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는 물가를 좀 안정을 시키게 되면 구매력이 살아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방금 금융위원장께서 이렇게 서로 질문 답변하신 것처럼 가계 부채 부담을 좀 덜어 드리는 것, 원리금 상환 부담 고이자율을 저이자율로 전환 대출을 시킨다든지 하는 등에서도 우선 내수를 살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는 역시 근본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내수를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일자리를 더 늘리려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산업 등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저번에 한국은행이 몇 십 개월 만에 금리를 다시 인하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이것도 내수 진작책의 일환이겠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했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중립성에 혹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제 의도 자체를 설명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감으로써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는 점이 있다……

**○나성린 의원** 그러면 기재부가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내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정 확대 이번에 일부 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이번에 GDP의 0.65%에 해당하는 8.5조 원 정도의 재정 투자를 저희들이 보강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성린 의원** 이미 있는 돈 가지고 하는 건데 추경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누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첫째 추경의 법적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의 경기침체, 대량 실업의 요건에 해당이 지금 되느냐를 놓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봤을 때 두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나성린 의원** 실제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으로서 추경 편성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저도 원칙적으로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장률이 3%로 떨어졌어요. 이 시점이 제가 볼 때 추경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3%보다 더 떨어진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와서 추경을 편성을 하고 2009년도 봄에 또 추경을 연이어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 2008년 3/4분기와 4/4분기 때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국제기준으로 경기침체라고 하면 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가 2분기 연속 나타나는 경우를 일컫는데 우리 경제의 경우 지금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0.9% 성장을 했고, 2분기에는 아직 지수가 나오지 않았습디다만 0.5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해 보면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침체 국면이라고 진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정부가 가만히 팔짱을 끼고 있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주로 기금의 여유자금과 공공기관·공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

로 GDP 대비 0.65%에 해당하는 8.5조 원을 보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과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한 그동안에 추경을 편성할 때 통상 규모가 GDP 대비 0.5%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정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궤적은 상당히 절제되면서도 바람직한 미세조정 폭 속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고,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대내외 경제위기를 점검해 왔고, 경제민주화를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요새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나성린 의원 그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경제민주화는 어떤 것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폐해, 즉 경제력 집중이나 또 그에 따른 남용 또 그 결과로 생기는 소득의 불균형 등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국가나 정부가 일정한 부분 규제와 조정을 통해서 경제 안정, 소득분배의 균형, 그리고 시장지배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이미 1987년에 만들어진 우리 헌법 속에 들어와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수정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마련됐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경제민주화의 개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의원 새로운 개념이 아닌데 왜 이 시점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할까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우리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실정법에도 각종 그런 규제와 조정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방면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또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논의되고 반영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서민들 생활이 어려워지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보다 더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좀더 제대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가 한번 챙겨 보자……

○나성린 의원 우리 총리님이 비교적 정확하게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나성린 의원 지금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경제민주화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나성린 의원 총리께서 비교적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안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력의 집중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의 차이를 잘 조정을 해서 이렇게 우위 열악 이런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 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각종 이런 조치들을 취해 왔고 그밖에 하도급 관계라든지 가맹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각종 실정법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균형 있게 조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약한 쪽에 힘을 좀 실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그런 법적 제도를 떠나서 또 법이나 제도가 규정하지 않은 틈을 타서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부당하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상속을 한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폐해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의 시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재벌 개혁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보호, 비정규직 차별에서 복지 강화 이런 것들이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민주화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야 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데 정부의 개입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민주당은 좀 더 많이 하자 그러고 우리는 적절하게 하자 그러고. 그런 것을 좀 잘 아서 가지고 우리 고위 관료들이 좀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디까지나 경제민주화도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추진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성린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세계 경제위기하에서는 누가 경제를 운용하더라도 서민층의 어려움을 일거에 다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야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서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께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리당락을 떠나서 부동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합시다.

자산가치의 하락이 경제침체를 초래하고 경제침체가 다시 자산가치 하락을 초래하는 불황의 악순환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는 그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합시다.

여야가 모두 추진 중인 재벌 개혁에 대해 재벌 때리기보다는 대기업의 국제경쟁력도 높이면서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확실히 근절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건드리는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금지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함께 연구하도록 합시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과거보다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과도하게 하락시키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셋째, 바람직한 복지 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을 추진합시다.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지출 증대는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 부담의 점진적 증대 또한 불가피합니다. 세 부담 증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부자 증세와 같은 포퓰리즘적 증세 방안보다는 조세제도의 전면적이고도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나성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의 민주당 합당 김영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해남·진도·완도 출신 민주당 김영록입니다.

요즘 FTA로 수출이 잘되고 있다고 FTA 효과를 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은 덕을 많이 보는가 모르겠습니다. FTA로 살 길이 막막한 우리 농어민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부는 물가를 잡는다고 울 초 삼겹살부터 시작해서 양파·마늘·배추 이런 농수산물도 무차별 무관세로 대량 수입을 해서, 물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어민을 잡고 있습니다.

농어민만 어려운 게 아니라 720만 자영업 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1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 참다가 요즘에 대기업 대형마트에 대해서 불매운동까지 이렇게 벌이고 있습니다.

서민과 농어민이 이렇게 어려운데 대통령의 형님과 부속실장까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면서 대선자금과 연계된 정권 차원의 대형 비리 게이트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만 군데가 끊어 터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선자금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의 들끓는 여론을 몰 타기 하기 위해서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서 소환을 통보하고 어제는 이석현 의원 보좌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소위 무소불위의 정치공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검찰 공화국입니까? 이 나라는 엄연히 민주 공화국입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여를 앞두고 검찰이 선거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이 불행한 정치공작에 대해

서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히고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부문 질문입니다마는, 총리께서 어제 민주당 소속 김재윤 의원의 5·16 역사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영록 의원 다시 한번 본 의원도 묻겠습니다.

5·16이 군사 쿠데타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어제 답변한 그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록 의원 지금 이 방송을 새로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쿠데타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언급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록 의원 언급을 안 하겠다, 어떤 내용으로 언급을 안 하겠다고 했는지 국민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한 대로 그것이 쿠데타냐 아니냐 하는 평가를 해 달라는 취지에 대해서……

(장내 소란)

○김영록 의원 답변하세요. 어제 질문에 회피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또 묻는 거예요, 총리가 나오셨기 때문에.

(장내 소란)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경제 질문 하러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경제 질문 할 게 많이 있는데 얼마나 이게 시급한 역사적 문제면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을 하겠습니까?

의장님, 답변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총리.

(「교과서에도 쿠데타라고 나와 있는 것을 총리가 답변을 못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자, 군사 쿠데타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냥 사실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행위를 말하라는데, 역사적 평가를 말하라고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 쿠데타면 군사 쿠

데타지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다시 분명히 묻습니다.

군사 쿠데타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평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가에 관한 문제인데……

(장내 소란)

○김영록 의원 평가에 관한 문제면……

(장내 소란)

자, 의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질문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역사 교과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에 ‘쿠데타’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자, 보십시오. 역사 교과서에도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5·16은 쿠데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그것을 말씀을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쿠데타가 무엇입니까? 혁명이 무엇이고 쿠데타가 무엇입니까?

(장내 소란)

○국무총리 김황식 ……

○김영록 의원 ‘5·16’은 뻗습니다. 쿠데타가 무엇이고 혁명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평가에 관한 문제이고……

(장내 소란)

○김영록 의원 답변을 하십시오. 5·16은 군사 쿠데타입니까, 아닙니까? 역사의 평가를 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말씀하라 이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김영록 의원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총리님.

답변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의원들께서……

○김영록 의원 답변하세요.

(장내 소란)

의장님, 답변하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국무총리 김황식 자,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것은 제 생각에 의하면 평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그 질문이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제 견해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가 국회에서 제기되는 그 원인 자

체는 유력 대선 후보자들, 정당 간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쟁이, 지금 논쟁이 붙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총리 입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하면 결국은 어느 한 편을 편드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정말 위중한 이 시기에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국민들 사이에 ‘그것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정치적 문제 논쟁에 붙여야지, 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총리가 그 문제에 끼어들어서 사회를 소란스럽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자제하는 겁니다.

(장내 소란)

**○김영록 의원** 총리께서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지를 았았으면 모르지만 ‘5·16이 쿠데타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총리가 회피하는 것은 역사를 회피하는 것이고 어린이 교육과 학생들과 후세를 위해서도 이것은 불행한 역사 인식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 의원이 다시 질문을 한 겁니다. 오히려 총리가 답변을 회피해서 지금 정쟁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을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사실이라고 하신다면 왜 그것을 저한테 묻습니까?

**○김영록 의원** 역사적 인식을 총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어제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장내 소란)

본 의원 질문하게 해 주십시오. 질문하게 해 주세요.

쿠데타 정의를 보면 지배세력 내에서 옆에서 치는 것이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혁명은 아래에서부터 불의한 위를 전복하는 게 혁명입니다.

4·19는 혁명이고 5·16은 분명한 군사 쿠데타인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석을 바라보며)

시간을 좀 빼 주세요.

**○의장 강창희** 하세요, 질문하세요.

**○김영록 의원** 총리, FTA 경제 효과를 보면 굉장히 부풀리고 있어요. 올 상반기에 107억 달러

의 흑자를 냈다고 정부에서 ‘FTA 효과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107억 달러의 무역수지를 짚어 보면 자동차에서 266억 달러 흑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159억 달러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FTA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하나 가지고 FTA가 효과가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한미 FTA하고 한·EU FTA의 발효 이후의 효과를 보면 한미 FTA는 발효 이후에 자동차 등 FTA 혜택품목 수출의 증가로 인해서 무역수지가 51억 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한·EU FTA는 EU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서 무역수지 흑자 폭이 대폭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이나 EU나 모두 소위 FTA 혜택품목과 FTA 혜택과 관련 없는 품목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EU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 자체가 12%가 감소했지만 혜택에 관한 품목에 대해서는 20%가 증가했고, 미국도 전체적으로는 8% 증가했지만 FTA의 혜택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16%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 혜택을 받는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FTA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록 의원** 총리께서는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소위 159억 달러, 자동차를 빼면, 적자입니다. 이것을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EU FTA 발효 1년간 지금 흑자 폭이 145억 달러에서 19억 달러로 대폭 줄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EU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EU의 재정위기, 그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인한 것이지, 한·EU FTA 효과가 없다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말씀드린 바와 같이 FTA 수혜품목을 기준으로 할 때는 훨씬 수출이 증가되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영록 의원** 그래서 경제에 플러스 효과가 뭔가 좀 있으면 ‘FTA 효과다’ 그렇게 하고 불리하면 ‘유럽발 재정위기다’ 지금 이렇게 정부가 발뺌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EU FTA 발효 이후에 대EU 수출액은 70억 불이 줄어들었어요,

70억 불. 수출은 줄고, 수입도 줄었으면 모르는데 수입은 56억 불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이렇게 흑자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한·EU FTA 이후에 56억 달러 수입액이 대폭 늘어난 것들이 주로 사치품, 자동차, 고가 명품 이런 것들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만큼 그것이 어떤 품목이 되었든 간에 그것도 FTA의 효과입니다. 좀 더 소비자가 선호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더 관세 혜택을 통해서……

○**김영록 의원** 서민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고가품만 늘어나는데 FTA의 효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게 서민경제하고 관련이 없는 고가품이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품목을 정확히 따져 보시면……

○**김영록 의원** 자, 총리님, 지난 11개월 동안 제조업 고용률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FTA의 효과가 있었다면 어떻게 제조업 고용률이 계속 줄어들겠습니까? FTA로 고용이 30만 명 늘어난다고 정부가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한중 FTA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한중 FTA만큼은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합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한중 FTA는 우리 국민들, 특히 농어민 중심으로 해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확대된 내수시장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FTA를 체결할 필요와 실익이 크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농어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2단계로 걸쳐서 즉, 첫 단계에서는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정리를 하고 또 그 토대 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 나간다……

그리고 이 한중 FTA는 의원님께서 아시아시피 이게 단시간에, 특히 이 정부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정부에서 또 승계를 해 가지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체결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왜 ‘EU는, 우리 수입은 증대됐느냐’ 그 지적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석유 구입선이 북해산 원유 수입, 그리고 관련 제품들 이 부분들이 새롭게 EU 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이 대폭 증대된 데에 대해서는 이 사정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록 의원** 다음 정부에서도 한중 FTA 문제는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중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우리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절대 한중 FTA는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총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FTA 국내 대책으로 FTA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예산을 정부가 지금 농업 부분에 얼마를 세우고 있습니까, 10년간?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전체로는 54조 원인데요, 농업 부분에 25조 1000억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의원** 54조 세제혜택 부분은, 예를 들면 면세유는 FTA가 아니더라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재정 투입만 보면 25조, 본 의원이 보면 27조인데……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추가로 돼서 27조 맞습니다.

○**김영록 의원** 자, 그러면 ‘27조를 10년간 지금 농업 부분에 쏟아 넣는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부분들을 사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허수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년 2조 7000억 평균예산이 농업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금년도 농업 부분 예산이 18조 1000억인데 내년도 예산 요구액 기획예산처가 실링을 적게 썼지요?

예산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산요구액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저수지 뚫 높이기 사업 등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제외하면 2.5%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을 포함하면 4.8%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의원** 내년도에 8000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 분야 국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07년도에는 6.5%였는데 금년에는 5.5%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27조 3000억이 되면 5%에 불과해 계속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FTA 대책으로 27조를 농어업 부분에 넣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 약속은 저희들이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김영록 의원 말로는 지키는데……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의원님, 아니……

○김영록 의원 예산으로 지켜야지 말로 지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아니,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그렇게 27조 원을 한다는……

○김영록 의원 기획재정부장관님, 계속 말로만 지키고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산에 저희들이 FTA 후속 대책으로 한 것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바로 올해 또는 내년부터 시작하지 않는 사업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만 받았고 아직 편성 단계에서 확정은 안 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김영록 의원 자, 2조 7000억이 아니라 1조 3000억이라도 농업예산에 새로 예산을 갖다 넣으세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대강 관련된 사업들을 제외하면 늘기는 좀 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을 좀 더……

○김영록 의원 4대강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간이 없는데……

4대강 사업은, 저수지 뚫 높이기 사업은 사실은 4대강 사업 같수기 때 물을 대기 위해서 한 것이지 농업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하라고 했는데 결국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안 하고 농업예산으로 했어요. 농업예산으로 2조 7000억.

4대강 사업, 뚫 높이기 사업 2조 7000억을 했는데 이 농업예산으로 한 4대강 사업이 끝났으니까 농업예산을 깎았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장관님?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영록 의원 그러면 뭐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농경지 리모델링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김영록 의원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도……

지금 저수지 뚫 높이기 사업을 이야기하셔야지.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업이 함께 이제 거의 종료가 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보시면……

○김영록 의원 그러니까 저수지 뚫 높이기 사업 때문에 다른 농업예산이 그동안에 투자가 안 됐어요, 논두렁, 밭두렁에. 하다 보니 길도 제대로 안 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못 했는데 이제 그 예산을 깎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김영록 의원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실 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아니, 사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처럼 농업 예산이 농업 종사 인구 대비해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은 다 농업 예산이 크게……

○김영록 의원 그 부분은 장관께서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농업 보조는 우리보다 배가 되고, 일본도 우리보다 농업 보조금이 더 많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 자료를 따로 저희가 드려서……

○김영록 의원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의원 제가 농림수산위원이예요. 4년을 했어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의원 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림식품부장관께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함께 물가 잡는다고…… 물가 잡는 게 아니라 농어민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양과 수입 무관세로 얼마 수입하기로

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11만t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의원 작년에 양과 수입 얼마나 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2만 1000t 계획인데 1만 7600t 했습니다.

○김영록 의원 작년에 한때는 kg당 500원에 수입해서 안 팔려 가지고 100원에 손절매도 했지요? 그러면서도 수입했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1만 7600t 수입했습니다.

○김영록 의원 그러면서도 작년에도 양과값 떨어졌는데 수입하고, 올해는 양과 조금 작황이, 작년보다 이삼백 원 올랐기 때문에 사실 평년작하고 가격을 비교하면 오른 것도 아닌데 작황이 좀 부진할 것이다 해 가지고 무관세로 11만t을 들여 오겠다…… 양과의 평소 일반 관세는 얼마입니까? 몇%예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평소 50%입니다.

○김영록 의원 그것은 저울할당관세가 50%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그걸 할당관세로 했을 때 10%로 하려는 겁니다.

○김영록 의원 135%입니다. 저울할당관세, 정부가 부득이할 때는 물가를 위해서 저울할당관세는 50%예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그렇습니다.

○김영록 의원 그런데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가 결정한 것은 그 50%도 아니고 10%로 11만t을 들여오겠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그렇습니다.

○김영록 의원 기획재정부장관께서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지금 양과가격을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20~30%가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138만t이 수요량인데 지금 112만 5000t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량을 어차피 수입해야 되는데 우리 양과뿐만 아니라 중국 양과도 흉작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당관세를 지금 50%를 10%로 낮추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록 의원 별로 지금 양과가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수확량도 확실히 예측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확량 추이를 봐 가

면서 국내 양과가 소진되는 걸, 소비되는 걸 봐가면서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이거는 저희들이 11만t을 들여다 바로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격이라든가 수급 동향을 봐서 방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의원 미리 사다 놓고 안 되면 풀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농산물가격이 지금 원가 이하 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급 상황이라든가 가격 동향을 봐서 처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의원 농림수산식품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 밀려 가지고 항상 농어민은 뒷전이에요.

자, 올봄에도 삼겹살 13만t을 무관세로 긴급 수입했는데 삼겹살가격이 내렸나요?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지금 삼겹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작년도 구제역이 일어나서 정부에서 332만 두를 땅에 묻었어요. 그래서 988만 두였던 것이 704만 두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얼마나? 구제역 나기 전에 988만 두였는데 현재는 943만 두입니다. 45만 두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겹살가격이 높이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상반기에 3만t을 들여왔는데 금년도 5만t을 들여오되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 동향을 봐서 방출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록 의원 자, 장관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결국은 누가 득을 보고 있느냐? 농민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니고 긴급 무관세로 들여오는 바람에 수입업자 배불리고만 있어요. 이런 정책을, 과거에도 이렇게까지 안 했습니다. 저울할당관세로 들여오더라도 물량도 조절하고 과감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아예 내놓고 물가 잡는다고 지금 농어민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장관이 거기 오하려 앞장을 서고 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량도 조절하고 수급이라든가 가격 동향을 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의원 앞으로 이 수급 조절 문제에 대

해서는 사전조사를 하고 사후에 물가 동향을 봐가면서 소비자 보호 조치 또 농민 보호 조치를 함께 취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의원 그다음에 쌀값이, 지금 목표가격이, 쌀 직불금 목표가격이 얼마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17만 83원입니다.

○김영록 의원 내년 2월 달에 이게 새로 결정을 해야 되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그렇습니다.

○김영록 의원 지금 정부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이걸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목표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록 의원 17만 80원 이하로 내려가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지금 현 상태로 보면 17만 83원보다는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의원 그 전망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2005년부터 2009년까지만 보더라도 물가는 상승하고 이 농자재 값이 상승해 가지고 쌀농사가 지금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9조 원의 수익이, 농업 수익이 지금 날아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격을, 17만 80원을 앞으로 변동직불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올려 주고 그다음에 보전율도 90%를 해 달라, 고정직불금은 ha당 7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농민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고, 그동안에 7년 동안 묶여 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지금 변동직불제 우선 말씀을 드리면, 85%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17만 83원에 2010년도에 산지 쌀값이 13만 7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하위로. 금년도에는 또 사상 최고로 16만 6000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 얼마나, 85% 보전을 하더라도 97.2%가 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0%까지 안 해도 목표가격은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문제는 나중에 국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까만, 앞으로 쌀값이 금년 말까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목표가격이 다시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해서 우리 농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테니까 정부는 국회 결정을 반드시 수용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김영록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어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보조를 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줘도 됩니다. 선진국은 우리보다 더 많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로 약속한 지원금마저 사실은 예산 조치는 안 하고 말로만 FTA 대책을 세우고 있는 이 정부, 반성하시고 반드시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창희 김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 출신의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 議員 TV를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오늘이 정치 분야 질문인 줄 아셨겠습니다. 오전 내도록 야당에서 입장을 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질문이 오후로 미루어졌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상북도 안동시 출신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입니다.

(강창희 의장, 이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금년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50년 전 1962년

도에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68달러, 작년에 2만 2500달러 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숨 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언제 가실지 모르는 먹구름이 유로존 상공에 머물러 있고, 안으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불황의 그림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9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 먼저 민생을 챙기는 일에서부터 그 시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0~2세 무상보육 문제, 경제성장과 자영업자 대책, 가계부채와 CD금리 담합 대책, 부동산 침체 대책,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내년도 세법개정 방향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0~2세 보육예산 지원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문드리고 국무총리님께 확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요, ‘오락가락 무상보육 애꿎은 부모들만 혼란’ ‘줬다가 빼앗는 게 국가정책인가’ ‘반년 만에 무너지는 전면 무상보육’, 그야말로 보육 대란이다 할 만큼 혼란스러운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셨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金光琳 議員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우선 그런 평을 듣게 된 데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일단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자체가 공급량이 어느 정도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그 총량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습니다만 가정보육이라고 해서 아파트 등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크게 급증할 것을 예측을 잘 못했던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확정을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점 등도 저희들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光琳 議員 지난해 12월 31일 예산 통과시킬 때 장관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심의 의결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金光琳 議員 그래서 그 후에 예측이 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의 4만여 어린이집에서 정부 보육료가 지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金光琳 議員 다 지원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아직까지는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고, 현재까지 전망으로 보면 10월 말경에 가면 현재 예산이 거의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고, 물론 서울시 등 수도권의 자치구, 특히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자치구의 경우에 보육 대상이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좀 늘어가지고 그런 자치구 등은 조금 더 일찍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얼마 전에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표한 대로 7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그 해결책을 제시해서 금년도 보육서비스는 당초 예산이 통과될 때의 정신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琳 議員 그러니까 예결위 과정에서 0~2세, 70% 소득 수준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100%로 늘리면서 한 19만 명이 늘어나서 한 70만 명이 수혜자가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늘어났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70만 명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6월 말까지 한 78만 명, 전체로는 조금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평균 76만 명 정도가 보육서비스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 명 정도 추가 수요가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그런 수요가 생겼습니다.

○金光琳 議員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전국의 0~2세 영유아를 두고 있는 어머니 수가 143만 명입니다.

그런데 78만 명 정도로 대책을 세우는데 사실은 한 달에 75만 5000원을 0세아한테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金光琳 議員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더 몰려올 거다, 숫자가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희들이 그런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어제도 공청회를 보건복지부 주관

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예측이 틀리지 않도록 치밀하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들의 지금 기초 자료도 사실은 조사기관에 따라 좀 들쭉날쭉합니다마는 검증을 저희들이 잘 해서 올 초와 같은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琳 議員** 50% 정도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의 지방비 부족이 문제되는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해결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도 자체를 좀 더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들어서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신뢰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사실은 재정 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중앙정부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 이상이 되고 자치단체가 한 20% 정도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의 채무가 훨씬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점 등등을 균형 있게 감안해서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琳 議員** 도로는 다 놓으면 완공이 끝납니다. 그러나 복지 프로그램은 완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신중하게 하고, 일단 됐으면 되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혹여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시작된 복지 예산이 다시 되돌려진다고 하면 그 이상의 신뢰 비용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추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의원님 말씀하신……

○**金光琳 議員** 그렇게 정무적 판단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제가 신뢰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전제를 말씀드린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金光琳 議員** 예.

총리님께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지요.

총리님, 0~2세 보육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총

리님 산하에 TF팀 구성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金光琳 議員** 지금 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143만 영유아 보육 어머니 그리고 4만여 어린이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金光琳 議員** 보육예산, 앞으로 문제없는지 이렇게 국민들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방금 기재부장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0~2세 무상보육은 차질 없이 집행이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여하튼 보육의 중단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光琳 議員** 이번 달 말까지 마련되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金光琳 議員**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성장률하고 고용 전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이번에 유럽의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앞으로 10년 이상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했고, 김석동 우리 금융위원장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김종수 한국은행총재께서도 GDP의 갭이 상당 기간 마이너스로 지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떨어뜨리고, 다음날 경제성장도 3.5% 전망에서 3%로 낮추었습니다.

IMF도 이번 주 화요일에 발표한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이번 세계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 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서는 지난 달, 이번 달 계속해서 ‘대외충격을 무리 없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거를 관리 가능한지, 수출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외환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

면 수출은 상당히 증가세 자체가 미미할 정도로, 전년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타격을 상당히 많이 입게 될 것입니다.

○**金光琳 議員** 대EU 수출시장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수출, 한번 말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EU는 기본적으로 우리 수출시장에서 9%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진 10% 차지하다 올해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에 24%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유럽에 18% 정도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 쪽에도 우리가 타격을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유럽 쪽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밖에 외환시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현대로 한다면 대외충격을 무리 없이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고, 상당히 견조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변동성이 금년 초보다는 높아졌지만 그러나 경쟁 상대국 등에 비해 보면 환율이라든지 자본 유출입 등에서 변동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외환자금 사정도 그런대로 저희들이 차입선 등을 다 다변화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金光琳 議員** 금년도 성장률 전망인데요. 작년 9월 30일에 금년도 예산 내시면서 금년도 경제성장 얼마로 하셨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4.5%를 냈습니다.

○**金光琳 議員** 그 후에 세 번에 걸쳐서 4, 3.7, 3.3으로 이렇게 줄어왔거든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두 번 낮추었습니다.

○**金光琳 議員**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7월 12일 3%로 낮추었고……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金光琳 議員** 또 JP모건이다, 노무라다 이런 쪽에서는 2%로 보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2%대.

○**金光琳 議員** 2%대로 진입할 거다……

그리고 BoA, 메릴린치는 1.8%까지 낮추어 봤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있는 세계 66개 나라 중에 24개 나라가 금리인하를 하면서 경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장

관님께서서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3.3%는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희들 전망치는 정부의……

○**金光琳 議員** 6월 28일 보셨는데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재정투자 보장 8.5조 원 더하기 금융확대 정책의 효과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3% 초반, 아주 초반대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은행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보다 20일 가까이 보름 가까이 늦게 전망을 했는데요. 그 전망이 결국 세계경제 전망치가 다시 수정된 것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에 관한 인식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의 경우도 3.0을 올해 볼 때도 전반기 2.7, 후반기 3.2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차이가 연초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상저하고(上低下高)’라는 점에서는 큰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고……

다만 상저하고라고 하더라도 현격하게 나아진 다든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별 차이 없이 미적지근한 회복세이기 때문에 서민들께 체감은 그렇게 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光琳 議員** 상고……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상저하고……

○**金光琳 議員** 상저하고, 하고가……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희는 상저중저하고 이렇게 사실은 전망을 바꾸었습니다마는 그 회복시기가 늦어지고, 또 ‘고’라는 것이 확 좋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미약하게 완만하게 좋아진다고 그렇게 보고……

○**金光琳 議員** 하반기도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金光琳 議員** 그런데 성장률을 1.2% 낮춰 보셨는데, 고용은 28만 명 늘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40만 명으로 높여 잡았거든요.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상반기에 이미 45만 명의 고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5만 명이 늘어난다면 평균 40만 명이 늘게 되지 않겠습니

까?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고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표상으로. 그래서……

○**金光琳 議員**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것이 저희들도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몇 가지, 학자들 사이에서도 고용과 성장률이 반비례한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오륙십대 쪽의 경제활동 의지가 매우 강하고 이분들이 아주 열심히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하는 점, 물론 노후소득 보장이 잘 안 되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고요.

○**金光琳 議員** 그래서요, 40만 개 일자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통계청이 상반기에 45만 개 없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이미 늘었습니다, 그렇게.

○**金光琳 議員**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오십대 이상에서 늘어난 사람들이 50만 7000개 자리가 늘었고 오히려 이삼십대에서는 7만 6000개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자영업이 열 사람 중에 네 사람 정도 늘어났거든요. 베이비부머 700만 명 은퇴 시기하고 맞물린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가 문제인데 총 720만 명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월 100만 원 정도 되고 또 150만 명 정도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러 들어온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피해 보는 것이 자영업자입니다. 한계선상에 있어서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취업훈련 시키고 또 일자리 알선을 해 가지고 임금 받는 쪽으로, 월급 받는 쪽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지금 말씀하신 자영업자 700만 명이라는 것은 아마 OECD 기준에 따른 비임금근로자……

○**金光琳 議員** 포함해서……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난 웨이지 워커(non wage worker)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통계청에서 말하는 자영업자는 573만 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무급가족종사자를 합치면 지금 말씀하신 비임금근로자 기준이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 비중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음식·숙박·운수·농림·어업 쪽에서의 생산성을 좀 높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오륙십대가 전체 50만 명 늘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인구효과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십대는 매년 한 10만 명 이상 절대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십대는 그 이상으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인구효과를 차감했을 때로 보면 이삼십대도 나름대로 취업이 되고 있다, 특히 역산해서 지금 시점으로부터 1년 전까지의 새로 직장을 찾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거의 한 70%가 사십대 미만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잘 감안해서 통계를 해석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삼십대, 사십대……

○**金光琳 議員** 줄어든 것은?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것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이십대는 5000명인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삼십대, 사십대는 다 인구효과를 차감하면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돌아가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고용이 지표상 좋게 나타나는 데에는 정부의 성장 우선적 여러 가지 정책들, 예를 들면 고용창출부터 세액공제 등등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金光琳 議員** ‘내일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서 내수 활성화를 끝장토론 한다’ 이렇게 언론에 났는데,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金光琳 議員** 여기에 자영업자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자영업자 대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내수 쪽에……

○**金光琳 議員** 포함해서 가지고……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내수 쪽에 저희들이……

○**金光琳 議員** 한계선상에 있는 사람은 전직을 하도록 하고, 장사 계속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빌린 돈 만기연장 좀 해 주고, 새로 시작하실 분

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이랄지 자금지원이랄지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일 포함시켜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저희들이 하여튼 내수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 자연스럽게 자영업자에 관한 대책들도 함께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琳 議員** 다음은 가계부채하고 CD금리 담합 대책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좀 나오시지요.

가계부채액 금년 3월 말 숫자 얼마입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911조 원입니다.

○**金光琳 議員** 911조이지요? GDP 대비 81%, 이것은 OECD 평균 73%보다도 높고 그 악명 높은 그리스 61%보다는 무려 20%포인트 높습니다.

2007년도 말 글로벌 경제 위기의 전과 비교해 보면은 기업의 부채 비율은 115%로 원위치 됐는데 가계는 그때 665조에서 1000조 됐으니까 한 5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도 연 8% 늘어나서 OECD 중에 세 번째 높은 속도입니다. 심각하지요? 평가 한번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시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외환위기 이후에 저희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협요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지난해 연초부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고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계대출의 건전성이라든지 저희 차주의 구성 그리고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 그리고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 보면 현재로서는 관리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또 상당히 위협요인이,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에서 앞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金光琳 議員** 소득 최하위 등급인 1등급에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금융부채가 자산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빌리는 이자도 제2금융권에 20%,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개 은행

이상에 돈 빌리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157만 명 정도 수준 되는데요.

이거 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상환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중채무자 제2금융권의 2, 30% 이자 쓰시는 분들은 좀 은행에, 지난번에 권혁세 금감원장 TV에 나오셔 가지고 하는데 10%짜리 새 상품을 만들어서 갈아타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빨리 신용회복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하는데, 이것을 좀 빨리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건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었고 특별히 어제는 저희가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방금 지적하신 여러 문제를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런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경기가 지금 둔화가 되고 또 소득이 부진한 저소득층이나 다중채무자 그리고 자영업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융 애로를 완화해 주는 노력이 정말 긴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만기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더라도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으면 일부상환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자제하도록 했고……

○**金光琳 議員** 연장도 해 주시고……

○**금융위원장 김석동** 연장을 해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출 리스크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한 경우에라도 차입자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부담을 좀 경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대의 상품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공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취약 계층들에 대해서는 중급 정도 되는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 대단히 참 긴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희망홀씨라든지 햇살론이라든지 그리고 바꿔드림론 같은 데서는 10%에서 대체로 한 13, 4% 이 수준으로 지금 이제 대출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대출이 뭐 충분한 양은 되

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그런 당면한 어려움은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金光琳 議員** 갈아탈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그러겠습니다.

○**金光琳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CD금리 담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CD금리 담합해서 고객 이익 가로챘나” “증권사 금리조작 통해서 검은 수익?” 어제 부터 이어진 보도인데 보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예.

○**金光琳 議員**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현재 저희가 17일, 18일 양일간 증권사와 은행에 대해서 아마 CD금리 결정 과정에 담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金光琳 議員** 기사에 보면 우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642조 원인데 그중에 43%는 이 CD금리하고 연동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예.

○**金光琳 議員** 이것 보면 0.1% 정도 담합해서 안 내렸다고 하면 3000억 가까이 되고 이게 0.2%면 6000억 가까이 된다, 그리고 1억 원 빌린 사람이 1년 정도 손해 봤다고 하면 10만 원, 0.2% 됐다고 하면 2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는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예, 지금 만약에 담합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 숫자상으로는 계산상으로는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金光琳 議員** ‘리니언시’라는 것이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예.

○**金光琳 議員** 뭘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리니언시라는 것은 자기가 담합을 했다고, 거기에 가담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거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거기에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으면 그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을 일정 부분 감해 주는 겁니다.

○**金光琳 議員** 그러니까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없이 해 주는 것……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예, 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金光琳 議員** 거기에서, 조사 대상 증권사 한사(社)가 자진 신고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지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공정거래법에 비밀보호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金光琳 議員** 담합모임으로 의심이 되는데, 부서장 간담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金光琳 議員** 위원장님, 좀 부담되지겠지만 이것 철저히 조사해서 가지고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발표를 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金光琳 議員** 부동산 시장입니다마는, 바로 추경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 질문에 추경 요건에, 경기 침체 요건에 전기 대비 성장률이 2번 연속해서 감소되어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그게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 경기 침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어느 상황이 침체냐 하는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통용되는 기준을 써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光琳 議員** 장관님께서 이 법의 발의자였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金光琳 議員** 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金光琳 議員** 그리고 2008년도 말 리먼 사태 이후의 세계경기 침체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두 분기 마이너스 된 적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2008년 3/4분기하고 4/4분기가……

○**金光琳 議員** 아니, 숫자가…… 나중에 봅시다. 4/4분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3/4분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적어도 그때는 명백히 우려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金光琳 議員**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었고 만약 두 번까지 마이너스 되도록 기다려야 하면 경제가 넘어져 버리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도 그 판단에는 동의합니다.

○**金光琳 議員** 그리고 추경 대상도 8월 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예산 할 때 그거 해 가지고 일자리예산, 보육예산, 신용보증기금 지원, 이번에 자영업자 위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이런 것들 몇 가지 골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단지 마시고 좀 열어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희가 닫고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재정투자 보강 등을 위해서 지난 6월 28일 날 발표했던 8.5조 원 그것도 사실은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혹시 저희들이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金光琳 議員** 추경의 가능성을 열어 놔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하여튼 그게 시기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金光琳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만인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다시 유럽발 재정위기가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주기도 빨라지고 위기의 진원지도,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탐욕, 빚내서 쓰고 후대에 부담을 지우는 무절제, 위기 앞에서 자기만 살겠다는 공동체 정신의 결여가 있습니다.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 위기 앞에서는 진력을 다하라는 논어에 나오는 선비정신 내용입니다.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 꼭 되새겨서 보아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김광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불과 0.52%의 소수지분으로 255조 원의 그룹을 지배하면서 황제 같은 권력을 2세, 3세에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세습하는 나라, 4조 5000억 원의 비자금을 보유하고서도 상속세 한 푼 안 내는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1960년 4·19혁명으로, 민주혁명으로 이룩한 정치민주화의 발판이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화발로 뭉개지고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으로 재벌공화국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재벌공화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 4년간 가계부채가 1000조, 서민경제와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몰려 삶의 터전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노동탄압 정권 아래에서 22살의 청년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외치며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1년 이명박 재벌공화국 아래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은 부당해고에 항거하며 장장 309일을 35m 고공크레인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 재벌의 끝없는 탐욕으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민경제가 파탄 나는데 은행들의 CD 금리 담합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담합으로 취한 은행권의 부당이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됐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여부 등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와야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희 의원** 지금 CD금리 연동대출 규모가 3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의 피해 규모가 최소한 5000억 원이 넘는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서민들이 물가로, 이자로 그리고 소득 저하로 죽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은행들이 담합해서 돈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엄단하실 계획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의원** 미국 같은 자본주의 천국에서도 담합하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하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유승희 의원** 공정위가 늘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또 뒤에서는 대기업들 담합 봐주기 하니까 매

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이번 담합 사건의 전말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얼마의 피해를 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파악해서 즉각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우리 김진숙 지도위원이 309일 크레인 농성을 하면서 한진중공업에서 받아 낸 약속이 있습니다. 총리,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해직됐던 사람들 복직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지난해 국회 권고안이라고 하는 여야 초유의 합의로 한진은 올해 6월 1일 자로 조합원들을 복귀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진은 그 약속을 전혀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정년퇴직을 1년 앞둔 조합원이 한 달 전에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지금 부산대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의원 한진중공업이 벌써 158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이제 다시 노조가 또 42일째 천막농성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가 김진숙 위원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한진중공업의 약속 이행, 총리께서 이 부분 직접 챙기셔서 이행사항, 정부대책,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고용부장관에게 그러한 취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과 가족 스물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죽음은 정부의 방침 속에서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뿐만이 아닙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OECD에서 우리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그중에서 노인분들의 자살률이 특히 높다 이렇게 알

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고요, 저희 지역구인 성북구만 하더라도 작년에 100분의 어르신들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유승희 의원 노인 빈곤율도 45%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공적연금 혜택을 받는 노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수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수치가 전체의 31.8%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유승희 의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액도 10만 원이 채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길거리에 나가 보면 종이박스 줍는 어르신들 그리고 지하철에서 신문지 수거하는 어르신들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지하철 타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요즘은 못 탔지만 예전에 많이 탔습니다.

○유승희 의원 바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현주소입니다.

총리, 하루가 시급하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그래서 일단 기초노령연금 전면 확대하고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은 계속 정부 내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희 의원 전면 확대할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대략 6조 원이 되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승희 의원 예,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이제 그걸 어느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올리느냐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예, 재원이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유승희 의원 그런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바로 경제민주화가 해법입니다.

총리,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얼마 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22%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그거는 명목상의 세율이고 다양한 세제감면 효과를 감안한다면 기업들의 소위 실효세율,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거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에 따라서 십몇 % 수준 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대기업의 실효세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십몇 % 수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십몇 %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내외……

○**유승희 의원** 대다수 중소기업이 22% 법인세를 꼬박 내고 있고요. 10대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이라고 하지요, 15.1%에 불과합니다. 혹시 삼성전자의 실효세율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마……

○**유승희 의원** 중소기업 22%의 딱 반토막입니다. 11.9%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는 대로 좀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각종 시설 관련 투자세액이라든지 비과세나 감면 혜택이 반영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그러니까 임시투자세액공제 그리고 R&D 세제 혜택 등의 이중 혜택을 주기 때문이지요.

매출액 규모 5000억 원 초과 재벌 대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0.1%인 415개입니다. 그런데 이들 0.1% 기업이 전체 감면액의 몇 %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질문의 요지를 주셨으면 그런 수치를 확인해 나올 텐데……

○**유승희 의원** 일단 답변을 좀 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각종 세제 혜택을 기업에 따라서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법정 세율과 다른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2010년도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감면액의 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전경련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또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속 일

몰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제는 재벌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임시투자보다도 고용창출과 연결시켜서 말하자면 과세 혜택을 주자 하는 쪽으로 변화를 시킨 겁니다.

○**유승희 의원** 그런데 상위 10대 재벌기업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해 보지요.

재벌기업이 투자 제대로 했습니까? 고용,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흔히 고용 없는 성장이 다 하는 것이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사업의 성격상 자동화라든지 이런 쪽의 장치산업 중심의 기업의 경우에는 성장을 하고 투자를 하지만 고용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그러니까 대기업이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사내 보유금이 무려 340조 원입니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효세율이 11%인데, 중소기업의 반 토막인데 고용창출계수는 6.45에 불과하고 전체 제조업 수치인 7.4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금을 감면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고용이나 투자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 대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어차피 이것 투자해도 고용도 창출 안 되는데 이것을 줄이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10대 재벌기업 대상 조세 지원액만 봐도 4조 9800억 원입니다. 그러면 5조 가까이 되지요. 그러면 이 돈을 전면 어르신 복지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전면 확대에 쓰자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사내 유보금이 흔히 말하는 재벌기업에서 많이 유보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은 세계경제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걱정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든지 지금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보금이 말하자면 세계의 다른 큰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 의원** 총리는 자꾸 이렇게 대기업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만 하지 마시고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5조 원에 가까운 재벌에 대한 세금감면 줄이고 어르신 복지에 쓰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재벌총수는 사람을 구타해도 그리고 수천 억 수조 원을 탈세, 횡령해도 실형을 사는 법이 거의 없는 것 아시지요? 이것이 바로 재벌총수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재벌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주에 발의했습니다. 옛 그제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형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적정한 양형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 의원** 총리께서는 총리로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법관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도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것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혹시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에서 재벌의 실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도 주면서 제대로 규제하자는 ‘기업집단법’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기업집단법요?

**○유승희 의원** 예.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우리 민주당에서는 재벌을 제대로 규율하자는 측면에서 기업집단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잘 모르시니까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 나성린 의원 질의에 답변했듯이 그야말로 경제력 집중 그리고 남용 그에 따른 사회적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현재 많은 우리 제도에 도입되어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취지하고 크게 어긋난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벌이 소위 대기업집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세계경제하고 맞서서 우리 국가에 주는 혜택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잘못된 행태나 폐해는 최대한도로 적발을 해서 시정을 하되, 다만 그것이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지고 합법적인 선에서 이루어지고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의원** 경제민주화가 불법이라는 얘기에요? 지금 기업집단법 제정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민주화가 온 나라의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정부가 뒷북만 치고 그리고 유행만 따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집단법 같은 그런 것들을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가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소위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각종의 여러 가지 연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대기업집단과 관련해서도 연구되고 검토되고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제도적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것을 고려를 해 가면서 이것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조화로운……

**○유승희 의원** 같은 소리 반복하지 마시고, 국책연구기관에 연구, 검토를 시키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책 중의 하나가 순환출자 금지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유승희 의원** 총리께서는 순환출자제도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A기업에서 B기업으로, B기업에서 C기업으로, C기업에서 다시 A기업으로 이와 같이 출자를 해서 지배를 하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가장 큰 문제는 말이지요, 출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꼬리를 물면서 지분의 가치가 소위 뺨뿔기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유승희 의원** 그러니까 재벌들이 겨우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5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

니까 지분의 가치가 50배, 100배 이렇게 뺏기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저희 민주당만이 아  
니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도 순환출자 금지를  
주장합니다.

총리, 순환출자 금지를 한다면 기존 순환출자  
까지 다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의원 그렇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순환출자……

○유승희 의원 그런데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  
자 이런 박근혜 식 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니  
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알기로는 순환출자 금  
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여러 가지 단계의 출자가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순환출자로 알고 있는  
데 그것을 지금 당장 금지하게 되면 그것을 지주  
회사의 형태로 바꾼다든지 할 때에 많은 경제적  
인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의원이 그런 주장을 했  
다고 한다면 신규 순환출자에 한해서 금지를 하  
자 하는 취지는 기왕에 이루어졌던 그 부분에 대  
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의견 아닌가 싶지  
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좀  
부족합니다.

○유승희 의원 그런데 총리께서 지금 한 입 갖  
고 두 말씀 하시는데, 지금 “기존 순환출자까지  
다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예” 그  
랬거든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 말은……

○유승희 의원 그래 놓고 와서는 또 딴 얘기 하  
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취지는 아니고…… 아  
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신규 순환출자하고 기왕에 있던 순환출자하  
고 명백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환출자  
금지 자체를 제가 찬성을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유승희 의원 지금 이게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  
이런 박근혜 식 해법은 재벌의 기득권은 철저히  
인정해 주자 이런 것 아닙니까? 암세포가 있으면  
다 걷어내야지, 그 이전에 생긴 암세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람이 죽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환  
출자 금지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유승희 의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강력  
하게 촉구합니다. 경제민주화 하려면 제대로 합  
시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 만듭시다. 적어도 순환  
출자 금지 들먹이면서 대선 장사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총리, 시장경제국가,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사유  
재산을 강탈한다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  
까?

○국무총리 김황식 국가가 사유재산을 강탈할  
수야 없지요.

○유승희 의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1960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부산  
일보, 문화방송 지분 100%를 강탈했고, 이 강탈  
한 재산을 기반으로 정수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  
는 시장경제국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맞습니다.

○유승희 의원 그런데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강탈된 사유재산의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총 11억  
3720만 원까지 받았다고, 2005년도 서울시교육청  
감사 자료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한겨레신문 7  
월 16일자에서도 보도가 되었고요.

총리, 쿠데타 권력이 강탈한 사유재산은 여전  
히 주인에게 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장학  
회에서 이사장으로 11년 일한 박근혜 의원은 정  
수장학회의 원주인과 그리고 그 가족에게 사과라  
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부일장학회가 어떤 경위로  
5·16장학회 또 정수장학회로 바뀌었는지 하는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송이 제기되고 있  
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사실관계가 어떻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유승희 의원 제가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총리는 지금 총리로서 얘기를 하세  
요. 법관으로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왜 정수  
장학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수장학회 사건이  
야말로 독재 권력이 사유재산을 강탈한 자유민주  
주의와 시장경제를 철저히 부인한 대표적인 사건  
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6은 불가피한 최소한  
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아직도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

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곧바로 벌어졌던 국가권력의 사유재산 강탈행위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총리, 독재 권력이 빼앗은 사유재산, 그리고 독재 권력이 깃뚫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해당사자 사이에 쟁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재판 절차에 따라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의원 총리는 정말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사유재산을 강탈당해서 원한이 맺힌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지금 총리로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총리가 법에 따라서.....

○유승희 의원 총리는 법관하세요. 총리 그만두세요, 그러시려면.

○국무총리 김황식 총리가 법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저 막연히 내가 짐작해 가지고, 또 사실상의 문제, 시중에서 잡담하듯이 이야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장내 소란)

○유승희 의원 잡담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지요.

여기 시간 끊어주세요.

저는 오늘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국가가 사유재산을 강탈하거나 국가권력이 시장에 군림하는 일이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절대로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총리로서 답변이 그게 됩니까? 시정잡배가 하는 그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국회에서 그런 답변이 답변이에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가가 사유재산을 강탈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옳은 말씀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를 뿐만 아니라 현재 쟁송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바로잡아질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다만 그게 진짜 강탈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승희 의원 다 밝혀진 사실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현재 그 문제를 가지고 쟁송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유승희 의원 총리께서는 총리로서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대법관으로 있을 때처럼 그렇게 한가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그런 총리가 돼야지. 왜 총리를 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역사가 정치민주화의 과정이었다면 이제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에 호소합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우리 시대의 소명 앞에 선거 마케팅의 수단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벌 대기업에 호소합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이 시대 흐름에 더 이상 역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경제민주화는 오늘의 시대 정신이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입니다. 우리 헌법 제119조2항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당이 앞장서서 진짜 경제민주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번 대선 승리를 통해 우리 헌법 제119조2항을 완전히 실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유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문경·예천 지역 군민들이 가득 채워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이한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한성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에 발전의 균형이 깨어져 국민 간에도 서로 마음이 편치 못한 분열

과 갈등의 싹이 자라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건설과 경제 발전의 성공이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성공신화를 낳은 우리 대한민국이 항구적인 발전을 해 가기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을 하고 제조업이 발전하는 그늘에서 농어업이 더 이상 피폐하는 것을 막고 국민 간의 소득 불균형이 해소됨으로써 서로 돕고 의지하는 화목한 국민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이를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리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법률가이셔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무 전반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이미……

○**국무총리 김황식** 예, 고용창출세액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한성 의원** 폐지되고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로 바뀌었다는 점을 저도 지적해 두겠습니다.

주요 언론 보도의 내용입니다.

보수언론조차도, 중앙일보에서는 “우리는 재벌의 자성을 촉구한다. 경제민주화가 왜 대세가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재벌의 활동을 쫓쫓 묶는 규제들이 나올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여기지 않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거나 벤처기업의 특허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빼앗는 일이 빈번했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좀 수궁이 가십니까? 보수언론이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는데.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와 같은 부당한 여러 가지 행태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조선일보에도 “경제위기로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가 더 심해진 탓이다. 그래서 대기업의 지나친 탐욕이 국민 원성의 과녁이 된 것이다.” 또 동아일보에서도 “재벌 회장들은 독점력 덕분에 시장점유율을 높였을지 모르지만 그 부친들이 가졌던 독한 기업가 정신은 이제 보기 어렵다. 그 자식들로 가면 빵집이나 열고 수

입차나 파는 후진국형 독점 착취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좀 걱정스럽지요?

이렇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핍박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렇게 국민적 걱정을 사고, 사실은 국민이 좀 화합해야 될 형편에 이렇게 대기업이 지금 매를 자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벌에서는 왜 우리만 때리느냐, 재벌 때리기만 하느냐, 재벌 해체를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률 전문가로서?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소위 재벌에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소위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또 무분별한 중소기업 업종으로의 사업 확장 등등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길래 정부에서도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은 동반 성장, 공생 발전 측면에서 상호 존중하고 공생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법적 장치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지금 확실한 성과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소위 재벌 때리기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세계와 경쟁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순기능도 함께 위축되는 일은 없도록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이고 적절한 선에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된다, 양쪽 측면의 모두를 균형 있게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성 의원** 총리께서 정말 균형 잡힌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

재벌이 물론 잘못된 건 많지만 재벌 때리기 혹은 1% 죽이기 이렇게 해서 국민 간에 어떤 편 가르기가 되고 재벌을 그냥 증오의 대상으로 이렇게 나가서는 곤란하다, 적어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화합하는 가운데 서로 상생 발전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한성 의원** 그렇지만 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성과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성과는 지금 안 보이고 있다, 지금 점점 더 악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사소한 것이지만 중소기업 업종, 빵집이다 커피다 이런 등등에 진출했던 것들을 전부 철수한다든지 그다음에 하도급업체, 특히 협력업체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R&D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을 서로 논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대기업 집단에서도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영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상호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잘 정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와 같은 추동력은 생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동반 성장, 공생 발전의 견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챙겨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성 의원** 그런데 그게 올해 같으면 기업체들 84.3%가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업체 57.8%에 걸쳐서 도대체 납품단가를 안 올려주고 있다, 도로 깔고 있다 이런 하소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정위에서 42개 전기·전자업체들이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맡겼다가 부당하게 이렇게 취소하는 사실을 발견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그냥 자체 시정으로 맡겨 놨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재벌에 대한 온건적인 봐주기 조치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어서 이렇게 성과가 없는 게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부분적으로 발생,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정화법, 또 하도급법, 또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등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서도 많은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정위에서도 정말 지금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백화점 입점 수수료까지도 다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서 반영하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정부로서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성 의원** 총리께서는 법률 전문가시니까 하도급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는 문제가 얼마나 큰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가를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한성 의원** 그런 관행이 지금 만연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시키다가 다 시켜 놓고 그냥 나중에는 그만둔다든지 혹은 철저하게 기술만 뺀고는 그냥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예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흔히 기술 탈취라든지 또 그와 같은,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라도 아주 부도덕한 그와 같은, 인력을 탈취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법적 수단을 통해서 손해를 회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법적, 제도적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문화 이전에 정부로서 그야말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모든 장치나 노력은 해 가고, 특히 그 과정에서 공정위의 정말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성 의원** 그래서 대기업의 어떤 그런 아주 부도덕한 중소기업 핍박 행태에 대해서, 백태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아주 자세하게 좀 열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런 중소기업 핍박 행태가 결국은 자기 계열사, 자식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귀착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또 그것이 편법 재산 상속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현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규제한다든지 그밖에 또 그것을 증여로 의제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증여세가 지금, 증여세가 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법이 그렇게 마련된 것으로 압니다.

○**이한성 의원**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사실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굉장히 미흡하다, 과징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을 증여로 의제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과세를 할 수 있는……

○**이한성 의원** 증여세 포탈, 물론 세법상이고……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게 되고,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나 각종 나름대로 제재를 가하고 있을 겁니다.

○**이한성 의원** 그러니까 시정명령, 과징금 가지고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삼성 이견희 회장이 삼성SDS 전환사채 헐값으로 자식에게 팔았다가 그것이 시세와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해 가지고 배임죄로 기소된 적이 있어서 유죄판결 받았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한성 의원** 그거하고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통상 같으면 70만 원에 입찰을 보고 경쟁 입찰을 부칠 것을 110만 원에 자기 자식 기업한테 수익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조세상의 조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과세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원래 회사에 손해로서 작용을 하고 그런 배임의 의도로서 했다고 한다면 형사 처벌도 돼야 되고, 뭐 그렇게 되겠지요.

○**이한성 의원** 형사처벌이 가능하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배임죄가 구성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한성 의원** 그렇지요.

그게 이제 그렇게 너무 터무니없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비싸게, 입찰 절차를 회피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식 기업, 계열사한테 수익계약을 해 주고, 그래서 회사에게 수백 억의 손해를 끼쳤다, 그렇게 한다면 그 회사 주주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비싸게가 아니라 싸게 혜택을 준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분명히 배임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의원** 그렇지요.

사는 것은 비싸게 팔고 또 파는 것도 싸게 팔고……

○**국무총리 김황식** 예, 파는 것은 싸게 팔고.

○**이한성 의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환사채는 너무 싸게 팔거나 혹은 또 도급계약을 할 때는 너무 높여 주거나, 뭐 그래서 회사 경비를 많이 지출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주주들이 배당할 이익을 적게 만드는 그런 회사 행위가 안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뭐 개별적인 사안에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상대방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가격을 실제 가격과 다른 식으로 거래를 했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조세상의 문제나 형사법상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의원** 그렇지요, 형사법 문제가 생기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한성 의원** 그런데 이제까지는 무슨 전환사채 헐값 발매, 이런 정도로 자기 자식들한테 상속을 줌 하려고 하다가 요즘은 일감 몰아주기로 이렇게 지금 편법 증여 상속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수법의 대물림, 이것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형법상의 어떤 배임죄를 구성하고 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마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충분히 해당되고 엄청난 형의 실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적절한 가격에서 이루어지면 다른, 말하자면 혜택을 준 것에 대해서 무슨 조세상의 문제는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정당한 가격에 따라서 하면서 일감 자체에 대해 혜택을 줬다고 한다면 그건 배임죄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한성 의원** 의도적으로 벌써 이렇게 가격이……

어떤 사건에 보면 적어도 통상가격의 72%나 이렇게 비싸게 준 게 있거든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안을 물론 따지지 무조건 범죄가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의도적인 고의가 나오고 또 현저한 그런 절차 위반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그런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특정경제범죄를 크게 저질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한성 의원 그래서 거의 계산을 해 보면 SK C&C는 7개 계열사로부터 비싼 값에 도급을 받아 가지고 싸게는 최소한으로 치면 833억 원의 이득을 봤고 최대한으로 계산하면 8569억 원의 이득을 봤습니다. 이런 사건이 단순히 346억 원의 과징금으로 끝났습니다. 이래 가지고 법 집행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이한성 의원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지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공정위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또 나름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했지 않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론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런데 이제 이런 심각한 사정을 보면 공정위의 그런 테두리 안에서만 이렇게 법 집행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결론이 맺어지고 공정위의 미지근한 법 집행 때문에 결국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이만치 악한 지경에 이르렀다,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공정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솜방망이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사실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공정위가 말하자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촉구하시는 그런 취지로는 제가 받아들이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각별히 관심을 좀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안에서 전속고발권 때문에 묶여 가지고 피해자가 엄연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 피해신고로 끝나면서 항고도 못 하고 그냥 범죄

도 암장되는 이런 사례가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전속고발제의 폐지가 논의가 되고 또 그러한 관련 법률이 지금 제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전속고발제에는 나름대로 필요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실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 효과도 아울러 검토하시면서 결정이 돼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이한성 의원 예.

물론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재벌이 너무 이렇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보호돼서 좀 부도덕한 행위가 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한성 의원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경제민주화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대기업의 부도덕한 중소기업 핍박 또 쥐어짜기, 이 행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동안 좀 너무 느슨하게 법 집행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비난이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소기업 그리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한성 의원 예, 그래서 대규모로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 자식 기업 혹은 계열사에게 막대한 과잉 이익을 부여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냥 보아 넘기고 혹은 과징금으로 처리한 이런 사례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그래서 그 분야는, 가령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관련 세법도 고쳤고, 저희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의 수위도 여러 가지 높이기끔 했고요.

문제는 일감 몰아주기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않도록 기업이 여러 가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 자발적으로 안 될 때는 그렇게 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시제도를 계속 강화해서 이해관계인들이 쭉 봄으로써 소위 사회평판에서 평가받게 하고 내부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게 하고, 이런 노력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들도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은 앞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한성 의원 예.

이렇게 자식에게 일감 몰아주는 이런 형태는 아마 선진 외국에도 없을 걸로 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만 자식 걱정을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온통 중소기업은 쥐어짜는 한편 자기 자식 기업에게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그냥 높은 가격으로 일감 도급 주고 혹은 또 싸게 팔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법적 잣대를 좀 들이대야 근절된다, 근절 의지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예, 공감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전속고발권 문제도 총리께도 말씀드렸지만 좀 채고·검토할 필요가, 일부 폐지가, 좀 확대하거나 문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밖에도 구성요건을 좀 완화하는 문제, 처벌기준을 내부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행태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으로 추가하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우선 전속고발제의 존재 문제는 이것은 참고로 국제적으로 볼 때도 기업의 경쟁법을 어긋나는 데 대한 제재는 아주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 형사법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많은 나라에서도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경쟁당국에서 판단해서 하게끔 하고 있다, 그만큼 공정거래 사안이라는 대단히 특수한 사항이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보다 엄격하게 죄를 진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서는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보다 강하게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논의가 되어야 되고 저희가 같이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성 의원 그래서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때 명백히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처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어떤 배임죄가 명백히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 또 노예계약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강요죄 이것이 명백히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하도급 납품업체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형법적인 그런 규정을 적용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경쟁법 논리로만 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예, 공감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공정거래법도 보면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런 규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18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13개 사항이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이한성 의원 기억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농업 쪽에 13개 또 중소기업 다 합치면 17개가 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렇지요. 그것을 잘 전부 다 수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참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런 반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그중에 일부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된 그런 발작물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에서 농사용 전기의 경우 일부 쌀이라든지 도정, APC 업체 등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 등등 약간의 미세조정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13개 사항이 다 충실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또 앞으로 그것도 집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면세유가 한 달에 한 31ℓ 정도 된다는데 지금 모자란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지금 1t 트럭 면세유……

○**이한성 의원** 그게 이제 확대되어야 되고……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게 연간 제 기억에 379ℓ 아마 사용량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 379ℓ 사용량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제 트럭으로 방제 작업을 한다든지 농산물을 수송한다든지 하는 데에 쓰이는 기름이 얼마인가를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79ℓ를 연간 이렇게 허용을 했는데 조금 농사짓는 그 규모 등에 따라서도 그렇고 작물에 따라서도 좀 부족하다 하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래서 저는 그 면세유 보급체계를 좀 합리화하고 좀 더 형편이 나아진다면 그 보급량도 좀 확대하는 게 좋겠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면세유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8월 8일 날 발표할 세제개편안에도 그 방안 일부를 좀 더 발전시켜서 담도록 했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세유 양이 어떤지.

○**이한성 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용배수로 시설이 아직도 사실은 참 엄청나게 많이 해 놓은 것 같아도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래서 전국에 많은 곳이 벌어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완공되자면 하도 수많은 곳이 벌어져서 이것이 완공된다 해도 10년씩이 걸리고 이렇게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최대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하고 용배수로 시설이 좀 더 확충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저희들은 하여튼 시설 투자 쪽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농업 자체가 경쟁력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우리 장관께서는 또 경제학자시니까 외부효과라는 말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이한성 의원** 그래서 공업 분야에서 벌어들인 돈이 농업 분야에 충실히 와서 외부효과가 상쇄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비단 그뿐만 아니고 농업 자체도 경쟁력을 가져서 효자 수출산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발농사 직불제를 곧 준비하고 있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이한성 의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밭에서 나는 여러 가지 채소·과일·양념류 농산물이 경작자가 좀 값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비싸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농산물 소비자가격, 물가 올라가는 그 걱정 때문에 외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하는 바람에 그냥 농사 잘 지은 농업인들은 또 주저앉고 말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이한성 의원** 이것을 보전하는 것이 직불제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이한성 의원** 그 직불제 준비가 철저히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농업인들이 애써서 키운 작물을 갖다가 수입해서 그냥 엉뚱한 사람이 득을 보고 농업인들은 그냥 비싼 가격 받지도 못하는 이런 처지를 잘 형평성 있게 보전해 주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농업 직불제는 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급조정을 잘해서 가격이 적정가격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것이 핵심 같아요, 보니까. 늘 농사짓다 보면 잘 지어 가지고 정부에서 수입하는 바람에 재미 한번 못 보고 폭락해 가지고 그냥 손해 보고 그해 농사를 재미도 못 보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때그때 정부는 또 돈을 벌어들이니깐 그것을 직불제로 줘야 형평에 맞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리고 산지에서 소 값은 싼데

갈비집의 고기 값은 엄청 비싸거든요. 도로 올라가거든요. 그것이 유통구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그렇습니다.

○이한성 의원 개선하는 근본 대책이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맞습니다. 유통비용이 산지에서, 만약에 소비지에서 1kg에 1만 원이라면 소를 키우는 농가는 5750원밖에 못받습니다. 그러나 유통비용이 4250원, 42.5%가 유통비용입니다. 그래서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소를 수집을 해서, 도축을 해서, 가공을 해서, 포장을 해서, 그다음에 도매시장으로 가서, 소매상으로 가서 소비자까지 갑니다. 5단계 내지 7단계인데 앞으로 이것을 3단계로 줄이려고 합니다.

양축농가가 도축장에 가져가면 거기서 도축·가공·포장까지 다 해서 바로 소매시장에 가서 소비자한테 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줄여서 농가소득은 높이고, 소비자는 싸게 소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개선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우리 장관님은 특히 농민의 대변인 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이한성 의원 우리 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참 잘하셨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이한성 의원 정말 육종 개량 그래서 통일벼 개발하고, 또 농기계, 경운기 개발해서 보급하고, 비료공장 세우고, 여러 가지 참 근대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농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참 열정을 바쳤습니다. 지금 그 열정을 또 돌이킨다면 아마 농민들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맞습니다.

저희들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우유를 먹여야 되겠다 해서 한독 낙농목장을 설치해서 지금 평택에 해 놓아서 그것이 지금 팜랜드가 됐습니다마는 그뿐만 아니라 산림녹화라든지 농업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크게 기여를 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러나 현재까지 농업 분야에 아직 미진한 것이 많고 도농 간에 소득 격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농업 분야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완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미 FTA 보완대책을 충실히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 개선을 해서 우리 농업이 선진농업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산업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여 모든 국민이 다같이 행복한 세상, 그런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이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입니다.

저는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을 하다가 국회에 등원하였습니다. 저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일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하는 국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 손님이 없어 한숨 쉬는 자영업자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여성 노동자들,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사장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총리님께 질문합니다.

생활현장에서 만나는 서민들이 한결같이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탄식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일선 취약계층들이 생활하는 그 현장을 많이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쪽방촌이라든지,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그런 곳이라든지, 또 장애인들 모여 사는 곳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학교는 물론…… 비교적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환이나 어려움을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자영업자들도 혹시 만나보셨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자영업자들 만납니다. 시장에도 자주 갔습니다.

○남인순 의원 요즘처럼 장사가 안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족을 포함해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0%인 718만 명에 해당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빚도 320조 원을 안고 있고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폐업과 함께 빈곤층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자영업자들이 경쟁이 과다해 가지고 또 수입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폐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 수를 좀 합리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취업 교육이라든지 또 컨설팅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도 취하고, 또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적합 업종도 이렇게 정해서 그분들이 좀 여유 있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그분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 매출이 2억 미만의 그런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1.5% 수준으로 낮춰서, 금년 12월부터일 겁니다. 그때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정년을 연장을 시키는 문제라든지 또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서 이렇게 퇴직을 해서 자영업으로 뛰어들지 않고 그 직업을 계속해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확실하게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인순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남인순 의원** 제가 58년생으로서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 720만 명에 이르고, 이들이 사실은 대부분은 자영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이 부분이 자영업자로 가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직장을 떠나서 또 건강도 하시고 그러는데 일자리 없어서 방황·배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임금을 덜 받더라도 그와 같은 직장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해 드리라는 문제라든지, 그밖에 지금 평균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취업에 필요한 능력들을 교육시키는 문제를 포함해서 정부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대책을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좀 특별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남인순 의원** 요즘에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자식 교육을 다 시키고 대학 졸업까지 시켰는데 “우리 애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놓고 있다. 제발 일자리 좀 구해 달라.” 이런 하소연이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3포 세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남인순 의원** 뭐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취업, 결혼 다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남인순 의원**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고 합니다. 총리로서 이 절망하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어떻게든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서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 구인구직 미스매치가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에 관한 정보라든지, 고용서비스 관련 사항들을 확대한다든지 또 실력만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고졸 취업자들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이라든지, 나름대로 다양한 정책을 세우고 또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또 국내 인턴뿐만 아니라 해외 인턴사업을 강구한다든지, 정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

들이 50만 명이고 또 불법 체재하면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17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67만의 외국인 일자리가 들어와 있고 또 나름대로 지방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는 구인난이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구직난인 미스매치 등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모든 사회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청년들이 좋아하는 방송 통신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쪽에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또 이것은 전반적인 경제상황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남인순 의원**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에는 좀 부족한 듯합니다.

여성 빈곤화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성근로자 중에서 저임금근로자가 거의 4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도 여성이 많고요.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여성가구주도 3분의 1이 빈곤합니다.

총리께서는 여성들의 어떤 일자리, 주거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의 빈곤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지원방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여성들이 빈곤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주거복지 또 양육·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11~2015년, 5개년에 걸친 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할 수 있는 그것을 지원한다든지, 또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그리고 여성 취약 계층의 근로자 계층을 보호하는 정책 등을 나름대로 지금 이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보육·양육에 부담이 없고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관련된 문제도 다 해결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출산 대책에도 여성 문제가 많이 포함돼 있고,

지금 말씀드린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에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일반적인 여성 정책은 되는데요, 빈곤한 여성에 대한 정책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부터 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남인순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나오십시오.

서민들이 주거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큼니다.

장관께서는 최저주거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인구 및 주택총조사, 센서를 통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조사해 오고 있고 최근에는 2년마다 주거 실태조사라고 해서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1인당 주거 면적이 12㎡ 이렇게 돼 있다가 최근에는 그게 14㎡로 늘었고, 이제 부부의 경우에는 26㎡, 수세 화장실, 목욕실 이런 게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런 어떤 지표 관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가구 중에서 한 10% 정도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저주거기준 가구에 대한 어떤 대책, 그냥 지표 관리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해소할 만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렇게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득 기준이라든지 가구원 수 등을 같이 고려해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킨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분들 중에 비닐하우스나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데 거주하는, 저희가 비주택가구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른 또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형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이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감면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자금을 또 지원하고 있고, 수급자에 대해서 노후주택 개보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최저주거기준 자체가 상향됐습니다마는 2006년 대비하면 그때 한 268만 가구 정도 됐는데 지금 180만 가구 정도로, 한 80만 가구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해소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를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 89만 가구입니다. 전체 가구 중에서 5%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이런 여건 속에서 어떻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을 앞으로 상향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한 12% 내지는 20%까지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08년하고 비교를 하면 한 31만 호 정도 늘어 가지고 지금 89만 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을 보면 유럽의 경우에 북구 쪽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나 이런 국가 등은 한 30% 정도 되고 오스트리아도 20%가 넘습니다만, 독일은 한 6%, 일본은 한 5%, 그래서 나라마다 사정이 좀 다릅니다.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주택시장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5%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이 앞으로 80만 호를 더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을. 그렇게 하면 한 10%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보금자리주택을 앞으로 18년까지 해서 150만 가구 늘리고, 그중에 아마 80만 호를 임대주택으로 한다는 계획인데요, 사실은 나머지를 분양하신다는 건데 분양주택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전세, 장기전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임대주택으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이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부분적으로 저희가 전세임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전환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우리가 국민임대를 하다 보니까 슬럼화 문제도 있고 소셜 믹스(Social Mix) 문제도 있고 지자체나 주위에서 거부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는 결국은 공급하는 주체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임대주택 한 채를 건설하면 1억 원 정도 부채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LH 공사 부채가 굉장히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되고.

또 사실은 주거복지나 주택 관리 측면에서 가장 좋기는 자기가 주택을 소유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70만 호에서 약간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소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인순 의원** 글썬요, 장관님의 주거에 대한 철학이 자가주택을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소유보다는 거주 개념으로서 주거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주거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금 이미 주거복지 관련한 법률들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이 있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있고, 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8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들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한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주거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지원해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고, 지원을 해서도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없는 분들에게 대해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남인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세계습지네트워크에서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최악의 습지 파괴 사업으로 선정해서 회색상을 시상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들었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의원님도 들으셨겠습

니다만, 4대강 사업 하면서 비닐하우스 3만 3000동을 포함해서 농경지 약 2000만 평을 생태적인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존 가치가 있는 습지는 존치를 하거나 어려우면 대체습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습지하고 관련이 대단히 많은 수변공간도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약 40% 정도 공간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나 습지 측면에서도 4대강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NGO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마는,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남인순 의원** 4대강 현장을 안 가 보신 것 같은데요, 엄청난 습지가 파괴됐습니다, 4대강을 파괴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현장을 되돌아보시기 바라구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제가 매주 4대강 다니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예?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매주 가 보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이명박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국책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지만 준공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22조 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고, 이런 자원 배분을 왜곡해서 신성장산업에 투자하지를 않았지요. 그리고 오히려 교육·복지 분야에 투자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4대강 사업을 할 때가, 2008년 말부터 해서 200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각국이 다투어서 재정투자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4대강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해 놓고 보니까 당초에 34만 명 정도 고용 창출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8% 정도 고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수입도 적지만 69% 정도가 고졸 이하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약 한 32% 정도가 지방 건설업체가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극복이나 또는 그 당시 근로, 이런 복지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지난해는 저희가 수해에서 혜택을 많이 봤고 금년에는 5월, 6월 가뭄에서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대강 사업이 시기적으로도 적절했고 또 성과도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인순 의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겠는데요. 그 폐해가 정말 적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4대강 공사로 인해서 현장에서 22명이 사망을 했지요?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이 참여해서 중소기업이 마치 그것을 통해서 수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행위 해서 비리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물을 확보해서 가뭄을 예방했다고 하지만 별로, 가뭄에 속수무책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보에서 누수현상 발생해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하상세굴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역행침식 등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별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참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이 4대강 공사를 떠맡은 수자원공사가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급격한 경영 부실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직접수행에 대한 법률 검토를 철저하게 했는지, 했다고 한다면 법적 검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수공법 9조에 보면 수공은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6조에 하천법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하천 관리와 하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해서 했습니다.

**○남인순 의원** 수자원공사가요 국토해양부 지시에 따라서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법률 검토를 해서, 이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관리, 국가하천은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직접수행은 법령에 위배되어 곤란하다고 하는 그런 법률 종합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수자원공사는 이런 의견을 냈는데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묵살한 거지요. 묵살하고 그냥 그대로 그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진행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수공에서 법률 자문을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니다. 받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을 한 데도 있었고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검토 결과도 있었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것 사실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인순 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증거 자료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참여의 적법성 여부는 법령 운용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또 그렇게 했습니다.

○**남인순 의원**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요. 이러한 법률 검토 공문을 묵살하고 사실은 그대로 진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이 규명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법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과거에 18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 법률 검토한 의견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과거에 18대 국회에서 이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남인순 의원** 지금 수자원공사의 이사와 임원들도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은, 뭐냐 하면 8조 원의 빚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면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법률 검토를 충분히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률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수자원공사가 매출액이 2조 원이

고요, 당기순익이 2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기순익을 2000억을 내는 회사가 8조 원의 빚을 내서 4대강 사업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의 문제는 결국 이 4대강 사업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수공이 이것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8조 원의 빚을 내고 나서 보를 건설을 해 줬는데 이것을 준공한 후에 국가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남인순 의원**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당장 회계상의 아무런 뭐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의 기부채납 및 회계처리 계획에 의해서 준공 시까지 투자된 총 사업비—약 8조 원이지요—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 후에 국가가 귀속하고 무형 자산 즉 친수구역사업권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해서 상계처리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수자원공사가 댐을 건설할 때도 건설하고 나서 댐 관리권을 통해서 물 값을 징수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인순 의원** 그러면 당장 이 8조 원을 수공에서 회계처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친수구역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최종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하다가 그것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친수구역 사업이요?

○**남인순 의원** 예, 친수구역 사업에 대해서 조성기본계획안, 그게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난주인가 저희가 부산의 친수구역 사업계획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공과 부산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공람공고를 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부산은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8조 원의 빚을, 이것을 계상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올해 수공에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

조 원은 이미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친수구역사업권이라고 하는 아직 가치가 매겨지지 않은 부분으로, 이것을 무형으로 계상처리 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친수구역사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혀 어떤 가치나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산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완전히 수자원공사가 빚더미를 떠안게 되고 거의 망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정부에서 방침을 정할 때도 친수구역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보전을 하고 또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지원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친수구역개발사업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남인순 의원**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지금 발언하신 거요? 아직 기본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수자원공사 상계처리 하는 것, 그것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국가의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정부에서 그런 말씀, 책임질 수 있으신 거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제가 결정하는 일은 다 제가 책임지고 합니다.

**○남인순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4대강의 산과 들을 좀 파괴하지 마십시오.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해결한다는 미명 아래 그나마 남은 4대강의 친수구역의 환경을 훼손하고 난개발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정 안 되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를 차라리 정부가 보전해 주고, 이 사업을 불법으로 추진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저는 불법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런 책임자들한테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의원님,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송 과정을 통해서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난개발 문제는 사실은 4대강 사업을 해서 개발 잠재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하면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개발을 계획적 개발로 유도하고, 그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친수

구역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그런 취지의 법을 제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아니, 친수구역을 개발하는데요, 지금 8조 원의 빚을 졌는데요. 친수구역 거기다 여러 가지 도시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8조 원의 수익이 나려면 수익률을 10%로 보더라도 80조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 하는 그것도, 수변도시도 제가 알기에는 5조 원이 들어가는데 수자원공사가 한 80% 대고 부산지방공사가 20%인가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수자원공사가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또 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완전히 빚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초기에 보상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달이 돼야 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금 회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수익이 일반적으로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남인순 의원** 지금 부동산 경기 이렇게 어려운 데도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한꺼번에 80조를 조달을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도록 돼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불황인데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사업성을 충분히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남인순 의원** 아마 이 상태로 가면 저는 수공이 거의 쫓딱 망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는 그간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이 밝혀질 경우에 엄중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예.

**○남인순 의원** 그런데 이번에 엄중 조치하기는 커녕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 공정위가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국민적인 비판이 거셉니다.

그래서 담합해서 공사비를 부풀린 업체들을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저희 나름대로는 이

건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적정 수준의 제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남인순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모두 8개 업체에 대해서 1115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인순 의원** 아니, 담합 조사하는 데 2년 8개월 걸렸더라고요. 2년 8개월 걸렸고요, 입찰 담합을 통해서 약 1조 원가량의 건설사들에게 더 들어간 부당이익이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1115억 원의 과징금 부과,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 갖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그런,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 조사 착수에서부터 마무리하는 데 말씀하신 대로 2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의 조사 범위가 굉장히 방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강 보 건설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공구가 16개가 되고 이에 따라서 조사 대상 업체도 건설업체가 한 20여 개, 설계업체도 13개 등 많은 분야에 많은 건설업체가 또는 설계업체들이 여기에 관련돼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입찰 담합을 찾아서 최종 제재하는 데는 통상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건은 자진 신고도 없었고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끈질긴 추적을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인순 의원** 공정위 심사관들이 이 문제를,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담합을 주도한 6개 건설사들의 임원을 검찰에다가 고발하자고 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의 심판 과정은 일반 형사 법정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형사법에 있어서는 검찰의 구형이 있고 최종 재판부의 판결이 있듯이 저희가, 심사관들이 원고에 해당되는데 그런 조치 의견을 낸 것을 저희 전원위원들이 양측의, 원고와 피고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9인 전원회에서 최종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남인순 의원** 공정위를 공정하다고 아마 국민들은 바라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십시오.

0~2세 무상보육 대란이 보육 수요 예측을 잘 못해서 일어났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전 그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을 의식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재정 분담을 사전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보육대란 사태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 70%까지 할 때 정부안을 낼 때까지는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12월 31일 예산안 통과될 때는 그 협의를 못 드렸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런데 이번에 2800억 국비 부족한 것은 추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방비 부담도 매칭으로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글썄, 아직까지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부 내부 방침을 아직 발표를 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7월 말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지방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고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제안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을 보시면 의원님 잘 아시듯이 50 대 50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나누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법의 취지 등을 감안해서, 그러나 또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점 그리고 작년 연말에 다소 좀 서둘러서 통과가 될 때의 전후 사정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잘 조율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무상보육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지만 보육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 낮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남인순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5%에서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결국은 이제 단계적으로라는 게 몇 년에 걸쳐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결국 재원의 문제가 또 함께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께서 선호하시는 국공립 시설도 늘려가야 되겠습니다만 또 학부모들께서 그다지 선호하지 않으시는 민간 보육시설의 질도, 품질도 좀 높이는 그런 노력을 병행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남인순 의원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3년제 성인 지예산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남인순 의원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선 방안 마련해 보셨나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희들 나름대로 여성가족부와 또 여성단체 등과 힘을 합쳐서 하고는 있는데 아직 역사가 일천하고 또 여러 의식, 문화 이런 토양도 아직까지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개선할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남인순 의원 아주 구체적으로 좀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남인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 마지막 예산안 편성 과정을 보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 지출 규모는 346조 원으로 올해보다 6.5% 증가했는데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5.3%로 오히려 총 지출 증가율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2%p 낮습니다.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절망의 시대를 넘어서 국민 희망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바라며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병석 남인순 의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아주 가벼운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개의한 이후에 국무위원들이 계속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생리 작용의 한계에 고통을 좀 느끼고 계십니다.

의장인 저도 벌써 두 시간 가까이 되는데 우리 대정부질문 의원님이 나오셔서 모두에 어느 어느 국무위원께 질문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대기하실 분은 대기하시고 그 사이의 짬을 지혜롭게 활용해서 더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북 군위·의성·청송 출신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 국무총리를 제외하신 나머지 분들은 다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군위·의성·청송군 출신 김재원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350조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국내 상장사 195곳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등 6개 기업의 대주주이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대한항공은 그룹 총수보다 보유 지분이 훨씬 높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에는 비교적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순환출자 방식으로 경영권을 장악한 경영자가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현재의 사외이사 제도는 경영자의 임의적 결정을 추인해 주는 경우가 많고 기관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은 소수 지분을 보유한 오너들의 기업 지배를 돕는 자사주 역할을 그만둬야 할 시점입니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2000만 가입자가 주인인 국민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면 주가가 폭락해서 기금도 큰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수십 년간 장기 보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주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법상 규정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자의 방만하고 부도덕한 기업 운영은 장막에 가로막혀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

다. 소액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서 국민연금에도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주권 행사를 강제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ABP, 캐나다의 CPP, 미국의 캘퍼스(CalPERS) 등 선진국 주요 공적연기금들도 투자 자산의 60%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의결권은 물론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운용기구가 독립성과 전문성이 약하다는 것이지요.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연금 가입자가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현재의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와 주식시장 부양 수단으로 기금이 이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차제에 세계 4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조직을 상설 전문 독립기구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누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을 전제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과연 기업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일감 몰아주기로 소액 주주의 이익을 가로채고 회사의 돈을 빼내어 돈놀이로 나서는 부도덕한 기업인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고장 나고 말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고장 나서 망하고 나면 도대체 이 땅에서 누가 무슨 재주로 자본가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 이제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판단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긍정적 효과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

영 간섭의 우려를 지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김재원 의원 총리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쪽이다 하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김재원 의원 앞에서 몇 번 이야기가 되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문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는 1980년 12월에 국보위가 공정거래법을 제정하면서 규정되어 현재 32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자가 소송조차 할 수 없는 전속고발권제도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보다 행정기관의 처분권을 우선시하는 관치시대의 유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속고발권제도를 유지한 것은 정당한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것을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공정위가 면죄부를 주도록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간의 담합 사건을 무려 5년 3개월간 질질 끌면서 능장을 부리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난 10월에야 처분하는 방법으로 아예 형사처벌 자체를 원천봉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공정위는 2년 8개월 동안 장기간 걸쳐 조사를 실시한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에도 과징금과 함께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공정위 심사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고발을 포기하고 과징금도 대폭 삭감해 주는 처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과 선례에 따라 담합 협조사들까지 포함하면 과징금은 최소 2000억 원, 최대 1조 4000억 원 정도가 부과되었을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처분은 공정거래법이나 공정위의 고발지침에 의하면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면서 고발은커녕 과징금조차 대폭 삭감해 주고 위법행위를 면책하는 데 공정

위가 앞장선 것입니다.

조금 전 공정위원장이 공정거래법을 거론하며 ‘중대한 범법행위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2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에 19개 대형 건설사가 조직적으로 벌인 이 담합행위 이것이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중대한 사건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10년간 공정위 시정조치 건수 이상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비율은 평균 1.1%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 반독점국은 28%를 고발해서 우리나라의 26배에 이릅니다. 더욱이 미국 반독점국은 고발비율이 계속 증가해서 작년에는 무려 63%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국가는 모두 전속고발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하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속고발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전속고발권을 제도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전속고발권이 없으면서도 리니언시제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강화하는 입법활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지금까지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데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 좋은 일 시키자고 공정거래법 강화하겠습니까?

현재 4000조 원의 파생상품이 관여된 CD금리담합 사건을 공정위가 조사 중입니다. 이것도 공정위에 맡겨 놓으면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공정위의 독점적인 지위를 해체합니다. 검찰에만 공소제기권을 주는 기소독점주의 원칙도 이제 재정신청 확대로 물고가 터졌습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합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행한 처분은 검찰과 법원이 다시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그것만이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총리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국보위가 만든 이 관치시대의 유물, 공정거래

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문제는 원래의 취지가 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을 처음 단계에서부터 형벌권을 가진 검찰이나 경찰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에 생기는, 나름대로 자유로운 기업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관한 파급 효과 등을 살펴보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외국에도 많은 예를 가지고 있는, 입법례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고 또 이것이……

○**김재원 의원** 일본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과연 위헌이 아니냐 하는 논의가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와 같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공정위의 운영 실태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제도 자체는 나름대로 근거와 족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제도인 만큼, 또 이 문제도 국회에서 아마 법률안이 제출되거나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제가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제출하셨군요. 제출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 금융권 인사의 특정지역 편중 문제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7일 경남 거제 출신으로 은행연합회 회장을 지낸 신동규 씨가 농협금융지주회장에 선임되면서 우리금융·KB금융·하나금융·신한금융·농협금융·산은금융 등 6개 금융지주사 회장이 모두 부산 경남 출신 인물로 채워졌습니다.

또 부산 출신 김석동 금융위원장, 박병원 은행연합회 회장,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까지 더하면 대한민국 금융권이 모두 특정지역 인물로 천하통일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금융권 4대 천황을 장악했다라고 하더니 그새 6개 금융지주 모두를 싹쓸이한 것입니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는 능력이 있는 없든 지역 균형을 고려하지 않아서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내 사람이나 챙기겠다는 태도가 보여서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권의 인사 파행이 그 도를 넘어

서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5월부터 임기만료되는 안택수 이사장의 후임을 인선하면서 역시 부산 출신 금융위원회의 홍모 씨 내정설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노조와 임원추천위원회의 반대여론이 들끓자 금융위는 홍모 씨를 포기하고 부랴부랴 임기를 마치는 안택수 위원장에게 다시 1년을 더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퇴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임직원들과 송별회까지 마친 안택수 이사장이 다시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일은 이미 일간신문 사설에까지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미개한 나라 이야기입니까?

총리! 이 금융권 인사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금융권에는 그 지역 출신 아니면 사람이 없습니까? 전라도·충청도·강원도·경기도·서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솔직히 금융권 인사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내부적인 선임 절차에 따라서 한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또 신보 이사장 문제도 제가 그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역을 너무 지나치게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인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편중된 인사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는 일반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의원** 하기가 총리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째짜미했는데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 문제점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3월 농협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분리하는 소위 신·경분리 농협조합법 공포되었습니다.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개정 농협법으로 금융과 유통이 분리되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농협법 개정 후 진행된 농협 사업구조 개편 작업은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고위공무원, 농협의 핵심 임원, 엄청난 수입료

를 챙긴 컨설팅 회사가 합작해서 245만 조합원과 300만 농민, 더 나아가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이 막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법률 검토조차 하지 못한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법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사모펀드 초과손실분 200억 원, 은행법 위반으로 세금 100억 원, 또 다른 손실 포함해서 수백억 원이 당장 손실이 났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업 경제 질과 자회사를 만들어서 경제사업을 할 때마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이 됨으로써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중소기업 적합 품종 제한 등 각종 제한을 받아서 아무 사업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제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농협은 뒤늦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법률가이지만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배제 조항을 입법해 달라고 지금 읍소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입법을 주도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뒤에서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숙원사업으로 추진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니 만큼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총 5조 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농협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넣은 현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책임자를 찾아내 문책을 해야 합니다. 재발방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농협법을 슬그머니 다시 고쳐서 공정거래법을 피해 나가려는 술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농식품위 새누리당 간사입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 관련자에 대한 문책, 정부에서 농협법을 다시 가져와서 재개정해 달라는 확실한 조치가 없으면 농협법 재개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잘못되었다, 현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소송뿐만 아니라 법을 바꾸자고 하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들었습니다.

○**김재원 의원** 누가 그런 이야기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어디서 받아 왔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요지를 주셨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 농수산식품부에서 보고는 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질의 요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챙겨서 이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김재원 의원** 한번 확실하게 파악해 보시고……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재원 의원** 이것 정부에서 책임자 찾아내서 문책하십시오. 정부입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이 지경이 되었는데, 지금 저 뒤에 농수산식품부장관 앉아 계시지만 찾아내서 문책하고 정부입법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국무회의 통과시켜서. 그렇게 해야만 국회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김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김제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김제남입니다.

오늘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준공된 지 34년이 되는 날입니다. 78년 7월 20일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이었고 자랑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4년이 지난 지금 고리 1호기는 안전 문제로 5000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 발전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이제 방사능 식품오염, 대규모 송전탑 문제, 핵폐기물, 신규 핵발전소 문제 등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70대 지역 어르신이 분신한 사건은 핵 발전이 낳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아픔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신고리 핵발전소 증설로 인한 거대한 발전단지는

초고압 송전탑을 낳았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지역 주민들의 절규와 눈물이 밀양·청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넘치고 있습니다.

핵에너지로 지역 간 불평등과 갈등이 없는 세상,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경제 분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와 지식경제부장관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에 2011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생겼다고 해서 안 되겠다는 후퇴, 해서는 안 된다.”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핵 정책을 고수했던 메르켈 총리는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자 “후쿠시마 사고가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총리는 안전을 선택한 것이지요. 총리께선 독일의 선택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후퇴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 원전에 관한 정책은 나라에 따라서 또 지도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그와 같은 대책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로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제남 의원** 그러면 우리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금 한국 국민의 다수는 원전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 의사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전은 아시다시피 체르노빌 사건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건에서 보듯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또 원전을 운영하더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나라의 에너지 정책, 특히 가장 값싸고 또 탄소 배출이 적은 이런 원전을 여건상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에너

지 여러 가지 현황상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책을 밀고 가는 수밖에 없다, 다만 안전성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제남 의원** 우리나라 에너지 현황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전량에 비해서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고 여름이고 간에 전력 수급 사정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관리해야 되는 또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이런 대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원전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일본도 최근에 아시다시피 전부가동을 중지했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가동을 시작했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이나 스위스 이런 국가에서는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그 밖의 나머지 나라들,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 브라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것은 원전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총리께서는 그동안 굉장히 값싼 전기를 쓰도록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우리가 전기를 흥청망청 쓰도록 하는 전기 낭비를 부추겨서 수요를 만들었던 이런 것에 대한 일차 책임을 먼저 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여건을 얘기하면서 에너지 수입국을 얘기합니다. 독일은 역시 2000년대 초까지 에너지 수입국이었음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60% 에너지를 수입했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 에너지를 수출하는 최대 수출국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으로 수출하나요? 원전 폐기하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3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전을 선택해서, 대안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모든 국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원전의 길로 가는데 대해서 총리께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 못했습니다.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TV를 보거나 여러 가지 홍보물을 보면 ‘원전은 안전하다. 녹색성장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홍보만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들이 내고 있는 전기요금의

3.7%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올해 원자력 홍보를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책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85억입니다, 연간 85억.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국민들의 원자력 홍보,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만을 보고 듣도록 하는, 눈귀를 막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내고 있는 준조세적인 전력기반기금입니다. 이렇게 지출하는 것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전력 공급의 약 30% 정도를 원전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이고, 또 아시다시피 UAE에 우리가 그동안에 축적한 기술을 통해서 원전을 수출하고 있고 또 많은 다른 나라에 원전 수출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된 우리의 능력을 더 키워 나가고 또 값싸고 그다음에 CO<sub>2</sub> 배출이 적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국부 창출에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원전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입니다.

○**김제남 의원**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자력문화재단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안전의 위험 그리고 안전의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고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을 위한 방재대책,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또 면진동(免震棟)을 만들어서 안전 훈련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 하셔야지요. 이런 데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홍보비용이 어디에서 얼마가 지출되고 있다 하는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의원님 그 지적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알고 안전 얘기를 하셔야 됩니

다. 그냥 입으로만 하시는 안전, 국민들은 믿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IAEA의 사찰단을 일부러 불러들여서 우리가 점검을 받고 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남 의원** 고리 1호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을 위태롭게 만들 뻔한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고, 그리고 한수원 납품비리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우연한 목격에 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제남 의원** 이런 일이 우연히라도 세상에 밝혀졌기 때문에 고리 1호기, 한수원 납품비리의 진면목이 이나마 일부라도 드러났습니다.

정작 발전소의 안전을 관리 감독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이 내용을 알려 주지 않아 몰랐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은 한수원 관계자 일부만이 불구속기소라고 하는 약한 처벌을 받았을 뿐입니다.

총리께서는 관리 감독 부서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실무자가 이 엄청난 은폐사고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먼저 고리 1호기 정전사건 은폐하고 관련 또 납품비리하고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원전 운영자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은폐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을 위해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정으로 인해서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결과적인 과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큰 결과적인 과실의 문제이고 직무를 크게 해태했다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총리께서 지금 굉장히 안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국민들을…… 비상 냉각수가 유실되어서 노심이 녹을 수도 있을 만큼의 엄청난 사고 직전 까지도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그냥 이런 정도의 안일한 말씀으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전에 대한, 정부가 그동안 강조하셨던 안전을 얼마만큼 방기하고 있는가를 저는 증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다시 한수원이 이런 사실을 계속 은폐하고, 한수원에 의해서 자료를 확인해야만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은 제2 제3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김제남 의원** 저는 이런 의미에서 고리 1호기 부실 실태, 그리고 납품비리 사건은 정말 많은 주민들도 이 사건은 이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나와야 할 얘기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고리 1호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또 IAEA의 기술단이 와서 점검을 했고, 또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뒤에 나와 계십니다마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했고, 또 당해 발전소에서 은폐를 하면 밖에서는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서 그쪽에서 숨기더라도 밖에서 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선을 했다고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시 외부에서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자력은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하는 그런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열심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시스템 말씀하셔서……

고리 1호기 정전 은폐 사고하고 관련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측정하는 아톰케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발전소 점검 중에 측정 데이터 오류가 많아서 알람 시스템을 꺼 놓았다고 답변을 듣고 있는데요, 자 한번 실

제 데이터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반인이 보더라도 분명한 정전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2월 9일 정전이 있었던 오후 8시 34분부터 46분까지 정전으로 센서가 데이터 측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두 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원자력안전기술원 그리고 관리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데이터 이상, 한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제남 의원 아톰케어는 고리 1호기 사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만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한수원이 준 자료에 의해서 알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다음 판넬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아톰케어 시스템입니다.

고리 1호기로부터 실시간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있는 아톰케어로 관련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고리 1호기에, 원자력본부의 주재관이 고리 1호기로부터 주는 자료를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정말 그 자료를 데이터를 확인만 했어도, 23개 항목에 걸쳐서 000으로 돼 있는 것을 자료만 확인했어도, 바로 정전이 지난 다음 그 순간 눈으로 확인만 했어도 확인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것을 한 달 이상 은폐가 되었습니다. 한 달 이상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수원이 준 보고서를 주재관이 보고받고, 주재관은 그것을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위에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한수원이 준 은폐보고서만을 갖고 한 달 이상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 어느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것은 아톰케어라고 하는 시스템을 방치했거나, 옆에다 그림의 떡처럼 놔두고 있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정전사고를 은폐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사고 당시

에 원전의 이상 상황 발생에 따라서 자동 통보되는 그런 시스템이 원전이 운전 중인 경우에만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런데 이번 정전사건의 경우에는 원전이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상황이 아니고 정비기간 중이어서 또 원전의 정지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한수원의 보고 없이는 그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스템을 개선해서, 정비 중이어서 원전 운전·운영이 중지되더라도 상시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을 은폐하고 숨기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조직적인 그런 조사를 하고, 말하자면 원전 근무자들의 문화의식을 바꾸는 그런 작업 노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한수원 사장도 지금 물러나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스템도 고치고 또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총리께서는 제가 드린 질의에 동문서답 하신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저……

○김제남 의원 이미 국민들은 제가 드린 말씀을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동문서답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고리 1호기는 전력 생산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서 이것을 폐쇄하더라도 전력 수급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고리 1호기 다급한 건가요? 전력대란 때문에 이것 안전 문제 있는데도 가동하셔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안전 문제가 있으면 가동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안전 문제가 일응 해결됐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원전의 수명이 30년이 되어 있고 그것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검사를 거쳐서 연장을 하게 되는데 수명연장에 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또 외국의 원전들도 이렇게 수명연장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지금 고리 1호기는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고……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민들이……

○**김제남 의원**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민간전문가라든지 그리고 고리 1호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IAEA조차도 와서 원자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자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냥 안전하니까 가동해도 된다고 하는 점검 결과만을 믿으실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안전점검, 다시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원전 전문가입니까? 저야 그간 경위라든지 이런 것 조사 보고받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원전안전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IAEA에서 와서 그 부분을 확인했고, 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지식경제부에서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안전검사에 주민들이나 또 그쪽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안전성은 확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더 보다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지경부장관에게 물으면 저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남 의원** 안전이 점검되지 않는 한 고리 1호기 재가동하지 않겠다고 총리의 답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경제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고리 1호기 재가동을 설득하려고 주민들 만나고 계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예.

○**김제남 의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 시민의 72.4%는 고리 1호기 재가동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66%는 고리 1호기 폐쇄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재가동을 설득하기 위해서 주민을 만날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주무장관이시라면 주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장관께서는 고리 1호기 폐쇄를 하는

정책 판단을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제가 뭐 재가동을 설득하는 이유가 단순히 안전하지 않은데 그냥 해보자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몇 번 내려갔더니 갈 때마다 또 소통이 되다 보니까 상당부분 이해도는 높아진다고 하고 저 나름대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하는 것보다도 이미 원안위에서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 여러분들을, 국민 여러분들을 좀 소통해서 설득시켜 보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하고, 고리 1호기 안전점검의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또 확인되고 있고, 많은 요구입니다. 그리고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이거는 나의 소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한 절차, 그리고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 여부는 판단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동 여부는 지식경제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안겨주기보다는 불안하고 또 납품비리사건 같은 총체적인 부실에 놓여져 있는 고리 1호기 폐쇄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안전한 것을 선물로 주는 그런 정책 결단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촉구드리고 것이고, 또한 한수원을 그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책임으로서도 마땅한 도리라고 제가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뭐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불안한 감을 갖다 드린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안전성이 입증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아직 불안한 분들이 있다고 해서 폐쇄하는 것은 정책 당국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하여튼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대신 저는 주민들에게 얘기하기를 “주민 여러분들 대다수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제가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제남 의원** 장관께서는 국민들, 주민들이 동

의하지 않으면 재가동하지 않겠다, 그리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재가동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아니요, 안전은 확인이 된 거고요.

○**김제남 의원** 확인되지 않았습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그러나 뭐 국가에서 안전을 확인하라고 만든 기관이 안전위원회인데, 그 안전위원회가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인데 그 원자력 강국의 안전위원회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을 저희가 신뢰하지 않으면 저희가 무엇을 믿고 이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전위의 판단은 일단 안전하다고 믿고요. 다만 그 믿음을 주민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동료·선배 의원들 25명이 고리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고리 1호기의 많은 문제들을 동료·선배 의원들이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압도적인 지지로 고리 1호기 폐쇄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선배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재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 아시는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제남 의원** 잘 알고 계십니다. 재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이지요.

많은 분들이 재벌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갖는 재벌에서의 문제는 재벌 총수의 지배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 해체 그러면 많은 분들이 큰 문제가 나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재벌 해체란 재벌 총수의 일가가 아주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지네발 경영을 하면서 재벌 총수 지배 체제를 만들고 있는 것, 그것을 해체한다는 의미입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하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재벌의 해체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도 재벌이 가지는 폐해를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해체'하면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송두리째 없애는 그런 쪽으로 느껴지는 말이기 때문에 재벌의 폐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시정할 것이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그러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SK 계열사들이 SK C&C 지분을, C&C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SK C&C는 최태원 회장 일가가 절반 정도 지분을 보유한 기업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동안 최태원 회장 일가는 SK C&C를 통해서 SK 계열사 시스템통합 사업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수조 원의 이익을 올렸고요. 계열사들의 이익이 SK C&C라고 하는 터널링을 통해서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벌어서 SK 계열사 전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인데요,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가 이렇게 계속 가져가고 있는 이게 바로 재벌 총수 지배체제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부적인 거래라든지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실정법에 위배되면 당연히 실정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실정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부당한 그런 일이다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또 법적 제도를 만들 필요도 있고, 그런 일반 원칙적인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석 부의장, 박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제남 의원**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미 지금 SK C&C가 자산의 60%를 출자해서, 출자한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로 규제받고 있습니까? 규제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지금 SK에 관한 그 문제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그런 쪽에 질문을 하신다는 말씀도 없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라면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와 계시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테 물으시면 더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남 의원** 총리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국민들에게 정말 망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재벌지배구조에 대해서 그

리고 그 재벌지배구조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만들고 있고 대기업으로 모든 것이, 특히나 총수 중심으로 하는 총수 지배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부가 쏠리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야말로 총수 지배, 총수 1%가 모든 내부회사 지분의 60%를 쥐락펴락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 의식입니다. 이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총리로서의 굉장한 무책임한 답변이시고 이미 우리 법망이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법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제도를 통해서 이런 총수 지배체제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SK에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변드릴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순환출자 금지라든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문제 등 재벌, 소위 말하는 기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적 문제라면…… 제가 이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제남 의원 마이크가 꺼져서 간략히 제 마무리 발언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사회의 재벌 그리고 재벌을 지배하고 있는 총수 지배체제가 우리사회에 굉장한 사회 양극화와 경제민주화에 저해되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상식에 기초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런 경제적인 병리현상인 재벌총수 지배체제를 해체하고자 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 될 일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이 재벌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네발 재벌 계열사가 중소기업 영역에까지 진출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이런 일에 동료·선배 의원들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좋은 법안을 만들고 일을 해 나가겠다 하

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김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 완산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전주 완산을 민주당 이상직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MB노믹스 현실은 어떻습니까? 재벌만 잘 됐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정치를 잘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금융회사 10년, 중소기업 10년을 경영했습니다. 실물경제를 경험한 결과 ‘희망의 불씨는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 개혁이다. 재벌 개혁의 지름길은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 소신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막창집 자영업자 심 모 사장님이 사업 실패와 사채시장에 내몰리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천만 명 그들의 염원과 얼마 전 자살을 한 그분의 영전에 경제민주화를 바치는 심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

○이상직 의원 누가 한 말인지 아시냐고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글썽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상직 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한 말입니다.

MB정권은 4년 내내 국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서민들의 피와 땀을 흠쳐갔습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단적인 예입니다.

위원장은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IMF 경제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저축은행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고 그러는 와중에 자산 규모가 급격히 확대가 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자금운용처를 적절히 찾지 못하는 가운데 부동산 PF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을 빠르게 늘려왔는데 2008년 이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부실화가 크게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금융과 관련된 감독도 제대로 적시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직 의원** 그것은 거시적으로 어프로치를 한 것 같고요. 저축은행 비리의 시작과 끝은 만사형통에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입니다. 구단주 이상득 전 의원, 팀—비리팀—축구 1개 팀을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김두우 전 홍보수석,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희중 청와대 부속 실장 등 10명의 친인척들과 실세들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또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정권의 비리의 끝이 어디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직 의원** 이들이 받아 챙긴 돈 어디에 사용했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저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직 의원** 최시중 위원장의 말처럼 대선 불법자금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글썄, 저로서는 짐작이 잘 안 갑니다.

○**이상직 의원** 그러면 삼화저축은행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만 씨 부인 서향희 씨, 홍콩에 외유 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최근 언론에서 그런 비슷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상직 의원** 국민들은 친인척 비리로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있지 않을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상득 전 의원과 같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그동안 저축은행은 상당히 구조적인 부실 요인이 있어서 지난해 연초부터 저축은행 총자산의 약 40%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구조조정을 다 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건전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에서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날 문제이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불법의 요소를 많이 차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직 의원** 지금 살아 있는 저축은행은 건전화됐지만 20개가 넘는 저축은행이 서민들을 울리면서 서민 돈만 들어간 게 아니고 정부의 돈, 국민의 혈세가 20조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열 분이 넘는 분들이 주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저축은행의 이런 부실 문제는 그동안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이고 이것이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인해서 현재화됐고 그래서 지난해 연초부터 저희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 자체가 그동안 우리 경제의 흐름과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생겨났던 문제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근본적으로 위원장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사태는 예고된 재앙이었습니까. MB 정부 출범 직후 이상득 전 의원은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등 측근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맞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저는 그 당시에 정부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이때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직했던 걸 분리하면서 금융 감독을 통제 불가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정부조직 형태는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정부조직을 할 때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하던 일부 규정 제정 업무를 같이 통합을 하면서 운용한 것이고, 그것이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직 의원** 초대 금감원장 김종창 전 원장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고 부산저축은행과는 결탁, 과연 저축은행 비리를 감독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저는 당시에는 정부에 몸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또 구조조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 위원장 책임이 아니니까……

불행의 씨앗은 잘못된 인사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저축은행에 파견된 금감원 감독관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제가 지금 숫자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직 의원** 전혀 통제가 안 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을 통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193명이 저축은행에 파견되었습니다. 상시감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는 93명이나 파견되었었습니다. 금감원장이 결탁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위낙에 저축은행 부실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때제때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김찬경 같은 횡령 범죄자를 누가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그것은 적절한 인수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직 의원** MB 정권의 실세들이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저는 그런 내용 잘 모릅니다.

**○이상직 의원** 결국은 이 모든 게 근본 원인이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걸 초대 원장, MB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초대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장에서 떼어내서 거기에 위원장을 앉힌 게 근본 원인입니다. 인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전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지만 금융감독 당국이나

금융정책 당국은 언제라도 시장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

이것이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과 산업에는 다수의 전문 인력이 있고 수많은 감시체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꼭 특정인이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또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그러면 잘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내부통제 방안, 비리 관련 내부징계 현황, 퇴직 후 저축은행으로 이직한 현황, 추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직 의원** 이런 인재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친MB 성향의 특정지역 출신 인사들이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일부 신문기사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저도 읽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신한·KB·농협·우리·하나·산은, 금융권의 꽃이라는 6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다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저도 몰랐는데 사후에 보니까 부산·경남 출신이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읽고……

**○이상직 의원** 모두 PK 출신인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위원장이 추천을 했다는데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저는 그중의 단 한 분도 추천한 적이 없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와 계셨던 분들도 많고……

**○이상직 의원** 그러면 이상득 전 의원이 지시한 겁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저는 정부 외의 어떤 분으로부터 지시받지도 않습니다.

**○이상직 의원** 그러면 청와대의 지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청와대에서 그런 지시를 저한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 되는지도 몰랐고 후보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이상직 의원** 그러면 언론에 나온 농협 회장에 대한 보도는 뭐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저는 그 회장께서 거기의 대상자 중의 한 명인지도 몰랐습니다.

**○이상직 의원** 그것을 몰랐고 누가 한지도 모른다 이 말씀입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그분은 농협에서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이상직 의원** 아니, 농협 말고 6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 말씀입니다.

**○금융위원장 김석동** 제가 오기 전에 돼 있던 분들도 있고 제가 온 다음에 되신 분들은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 산은금융지주회사의 경우는 저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가 돼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사후적으로도 들은 게 없다, 아는 바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민간 금융기관에는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 밝혀지겠지만 회장추천위원회가 내부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고 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들이 그야말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거기에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직 의원** 금융 권력의 독식에 대하여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야지 저희 인사가 투명하다는 것이 좀 밝혀질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들어가시고,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얼마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직 의원** 새누리당과 정부가 포퓰리즘이라고 왜곡·호도하는 비용이 무상급식 9500억, 반값등록금 4조 8000억 등 약 17조 수준입니다.

그러면 MB 정부 부자감세로 4년 반 동안 재벌들에게 퍼준 재벌 포퓰리즘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어떻게…… 재벌 포퓰리즘으로 해서 재벌들에게 퍼줬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직 의원** 민주당이 하면 포퓰리즘이고, 보

편적 복지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재벌들 부자 감세하면 재벌들에 대한 포퓰리즘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감세정책은 재벌……

**○이상직 의원** 금액만 말하세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부자감세로.

**○국무총리 김황식** 감세정책에 따라서 도모하고자 하는 효과에 따른 감세정책을 해야 되지……

**○이상직 의원** 금액만 말하세요, 금액만.

**○국무총리 김황식** 우선 ‘재벌에게 감세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감세 혜택은, 물론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모든 국민이 갖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이렇게 계산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직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자감세로 감세를 해서 세금이 얼마 감세했습니까, 금액이, 총금액이?

**○국무총리 김황식** 감세정책에 따라서 얼마가 감세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직 의원** 제가 경제 공부…… 쉽게 줄이겠습니다.

90조입니다. 연 20조입니다. 거의 70% 이상이 재벌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것입니다.

자, 보편적 복지 17조와 부자감세로 인한 20조, 누가 진짜 포퓰리즘입니까? 부자감세로 인한 그 재원을 원위치해서 국민들한테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겁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감세정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에 경기를 활성화하고 또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하는 그런 등등의 목적으로 취해진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퓰리즘과 연결시킬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감세정책에 의해서 누리는 효과는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온 국민한테 돌아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상직 의원** 온 국민한테 돌아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로 90조 혜택이 갔으나 재벌 일자리 10% 증가했습니다. 재벌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 자동화하기 때문에 종업원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국민들한테 다 혜택이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그러면 박근혜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서 또 법인세는 가능한 낮춰야 된다고 합니다. 재벌들에게 계속해서 특혜를 주자는 건데, 그

러면서 경제민주화를 외칩니다. 이거 짝퉁 경제 민주화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법인세율을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되는 문제이고, 특히 법인세의 경우에는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하고 또 우리 기업을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잡아 두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직 의원** 제가 금융……

○**국무총리 김황식** 그리고 OECD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인세나 소득세는 낮추고 소비세는 늘리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상직 의원** 총리, 제가 금융회사 10년 중소기업 10년을 경영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상직 의원** 지금 90조가 다 재벌들한테 혜택이 갔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MB노믹스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낙수효과가 안 난다 이 말씀이 고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법인세를 또 낮추겠다, 그런데 또 복지를 하겠다. 그 재원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총리의 생각은 어떠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감세 정책이라는 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해외 기업들하고 경쟁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상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고요.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17대 국회 때 연금사회주의를 말했고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줄푸세’를 주장했던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외치니 국민들이 헛갈려 합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 격세지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어떤 데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는지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직 의원** 연금사회주의를 말하고 지금 대통령이 되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불과 4년 전에 줄푸세를 했다는 말입니다. 거

기에 대해서 이해가 상충된다고 국민들이 헛갈려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국무위원이 유력한 대권 후보의 행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직 의원** 그러면 장관은 경제민주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헌법 119조2항에 보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조화로운 발전 등’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전체적으로 여러 경제 주체들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토대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자, 마지막에 보면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19 조입니다.

그렇게 잘 알고 계신 분이 ‘경제민주화 하면 우물 안 개구리식, 북한처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제가 해명을 했고 그 녹취록까지 상임위에서 읽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2개의 말들 사이에 여러 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중간 말을 생략하고 이어가서 처음 시작과 끝에, 중간에 있는 것을 다 빼고 하니까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상직 의원** 예,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장관이 신봉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기업의 주인은 사실은 주주들과, 기업을 주주들이 뭐 기본적으로 주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소유 개념을 떠나서 기업에 몸담고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 경영자들까지가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직 의원** 만약 1% 지분을 갖고 있다면 1% 권리만 행사해야 된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유와 경영은 꼭 지분에 따라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일본 토요타 자동차의 경우에도 0.5%의 지분을 가지고 실제 경영을 다 하고 있고 미국의 GM이라든지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꼭 획일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직 의원** 획일적으로 될 수 없다…… 그러면 1%도 안 되는 재벌 총수들의 지분이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GDP의 75%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지금 지분과 경영 자체를 엄격하게 수학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자칫 탄력적인 경제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가급적이면 지분율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지 못한 사례도 세계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심층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직 의원** 그런 재벌 개혁이 아닌 재벌 옹호 때문에 재벌의 지배구조가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순환출자 금지 이런 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까.

그러면 장관은 재벌 순환출자를 규제하면 경영권 방어에 어렵다, 외국 기업과의 경쟁 등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자체를 규제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에 전세계에 어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또 그림을 그린다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지배구조 자체를 전제로 하고 문제를 좀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특정 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한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고 그렇게 될 때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우리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그 외에도 공급망 등을 보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기업 집단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일률적으로 이게 옳다 나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매우 다양한 경제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틀로서 재단 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느냐, 또 순환출자를 금지 하게 되면 다른 형태, 방사형이나 피라미드 형태의 출자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규제를 하게 되면 또 해당 기업 집단에서는 둘러가는 편법을 구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등등까지 염두에 두고서 상당히 치밀하게 정교하게 이 제도를 설계해야 될 것이라고 보

다.

○**이상직 의원** 그러면 SK가 소비턴, 외국투기 자본한테 경영권 침해를 받았는데 이럴 때 국민 연금이나 공적연기금이 경영권을 방어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특정 기업의 사례에 대해서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그런 국민연금 등을 비롯한 연기금은 또 연기금 나름대로 가입자 또는 정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립 목적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배구조의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직 의원** 그러면 장관이 얼마나 모순 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캘리포니아 연기금 캘퍼스(CalPERS)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합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행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표가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캘퍼스는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4.4%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캘퍼스는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도 이른바 연기금 사회주의라든지 그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권한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의 경우는 최대 주주로서 또는 최대 주주 다음 주주로서의 영향력까지 보유할 정도로 우리 주식 시장이 미치는 힘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외국의 특정 기금 등과 비교하는 것은 또 좀 어려움이 있다…… 제가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수용을 하고 연기금의 주주권 적극적 행사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캘퍼스와 국민연금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상직 의원** 자, 큰 방향에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진도 나가겠습니다.

알짜배기 인천공항과 인천공항 급유시설을 외국자본한테, 먹튀자본한테 팔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인천공항도 그렇고 더더구나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외국자본에 매각한 적이 없고요.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인천공항에다가 매각을 하고 인천공항이 소유권을 갖고 운영

만 위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에 가시면 약 20여 개의 시설들, 수하물 처리라든지 또는 면세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이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급유시설도 소유권은 인천공항이 가지고 있고 운영 자체만 아웃소싱을 한 거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인천공항도 외국에 판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이상직 의원** 아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오해고……

○**이상직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2010년 2월 1700억 정도 런던 개트워공항에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이상직 의원** 자, 이렇듯 국민연금이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금입니다. 그러면 외환은행이나 맥쿼리가 투자한 SOC나 인천공항 같은 걸 국민연금한테 팔면 됩니다. 외국에 있는 것도 국민연금이 사는데 왜 국내에 있는 걸 자꾸 외국자본한테 팝니까? 뒤에 이상득 전 의원이 있었던, 맥쿼리 코리아 사장으로 근무했는데, 뒤에 이상득 의원 아들이 근무했던 맥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의원님, 하여튼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해서는 지분매각입니다마는 좀 더 성실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51% 지분을 민영화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인천공항을 매각하려고 공모절차까지 들어갔습니다마는 역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51% 지분은 정부가 가진다, 마치 한국전력처럼. 그래서 49% 지분을 최대 매각을 할 텐데 그것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기업공개, IPO를 통해서 15% 지분 정도를 시범적으로 상장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지분매각은 특히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만약에 국회에서 합의를 해 주셔 가지고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6개월 이상 1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밖에 진

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인 누구에게 팔려는 특혜 의혹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려는 것도 지금 인천공항이 서비스 수준에서 7년째 1위를 하고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데 왜 팔려고 하느냐 그러시는데 옛날에 포스코, 기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KT, 다 잘 나갈 때 사실은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력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하는 이유도 한 7, 8년 전에 우리가 전력 사정이 괜찮을 때, 잘 나갈 때 발전소를 안 짓고 안주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지금 고생하는 거거든요. 인천공항도 제가 볼 때 빨리 3단계 확장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서비스 수준은 지금 괜찮지만 여러 가지 환승률이라든지 이런 지표에 비추어 보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직 의원** 제대로 맥을 짚고 있으니 다행이고요.

두 가지만 지금 약속 지켜 주십시오.

이번 임기 때는 안 한다, 그리고 외국인한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국민연금이나 연기금도 돈이 많고 외국 공항까지 사들이는 마당인데, 그것만 정확히 맥을 지켜 주시고……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희가 하려고 해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제 IPO 하려면 재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하는 근거를 법에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에 팔려면 뭐 법을 안 고쳐도 되긴 합니다마는 이게 국민적 관심사인데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매각하는 건 어차피 다음 정부의 몫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한미 FTA하고 똑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쪽 해 오던 겁니다. 갑자기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하려던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외국 정부에, 외국에 팔려는 것은 저희들이 전략적 제휴를 하는 항공사 지분을 5%로 제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또 외국인 지분을 최대 30%까지로 제한하는 법안을 냈는데 만약 이것을 좀 불안해하신다면 뭐 외국인 지분율을 좀 더 낮출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건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상직 의원** 예, 들어가세요.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CD금리 담합 증거 찾았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그건 지난 17일, 18일 이틀간 현장조사를 했고요. 지금 불과 한 3, 4일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단정적으로 지금 여하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직 의원**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요.

과거의 4대강 담합, 재벌 담합 문제 등 처음에는 거창하게 출발했는데 끝이 지지부진했습니다. CD금리 담합, 과거처럼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직 의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즘 재벌 지배구조 발표, 부당내부거래, 대형 유통업체 불완전 계약 등 많은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편히 쉬시고 후반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이상직 의원**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총리, 재벌의 독과점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독과점이 경제민주화의 독인가, 왜 깨야 하는가, 지금부터 밝혀 보겠습니다.

MB 정부 재벌정책으로 현대차는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영업이익률이 3.8이었는데 매년 큰 폭으로 증가, 2011년에 10.3%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는 물가상승률 3.6%에도 못 미치는 3.5%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이 수치만 가지고 보면 납품 단가 같은 것들이, 현대차 이익이 그쪽으로 전이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직 의원** 그 상황입니다. 자동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아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들과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봉이고 협력업체는 머슴입니다. 총리가 그걸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기름값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서민들은 기름값에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기름값 관련해서는 정부가 얼마큼 기름값 인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알뜰주유소까지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쉽게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오를 때는 재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 또 비율도 그에 상응하게 비례하지 않는다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참 그 대목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지경부에서도 조사단을 구성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그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지금 수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국제유가 거래시장의 여러 가지 사정 등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독점적으로 어떤 큰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그 문제만은 아닌 문제들이 많이 개입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직 의원** 담합이고 독과점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HHI, 허쉬만-허핀달 독점·독과점 정도를 보는 수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이것 때문에 택시·버스 업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총리께 다시 하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휴대폰 요금 얼마짜리 쓰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한 7만 5000원 정도 요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가 대동소이합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단말기하고 이용요금하고를 한꺼번에 이렇게 판매한 관계 아닙니까?

○**이상직 의원** 맞습니다. SKT KT U+ 함께 판매가 아니고 세 군데가 담합을 해 가지고 가격이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ST(internet space time)라고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직 의원** 제4통신사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통신요금 이 반값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반값이 아니더라도 1만 원만 떨어지면, 5000만 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1년에 6조가 절감됩니다. 이것은 옛날의 정통부가 있었으면 정통부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 생각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통신이용료 부담이 국민들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재판매사업을 활성화한다든지 단말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그것을 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 그리고 기본료를 낮추고 또 이용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그런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새만금특별회계,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그리고 LH를 전북에서 진주로 양보하는 대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연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상직 의원 거기에 대한 생각……

○국무총리 김황식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은 전주로 가게 되고요. 또 새만금에 관해서는 지금 총리실에서 새만금지원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북도에서 특별청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관련된 용역을 진행을 시키고 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새만금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장 좋은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와 연장선상에서 어느 시점에서 청을 만들 것이냐, 특별회계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직 의원 검토를 하지 말고 총리하고 정부가 약속했으니까 정권이 6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약속을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국민연금만 보내지 마시고 기금운용부를 보내야지 왜 차 떼고 포 떼고 보냅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은 LH공사 본사를

어디로 두느냐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때 수차 논의된 문제입니다. 논의된 문제인데, 적어도 LH공사에 가는 인력 이상을 여하튼 전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이번 임기 내에 약속을 지켜 주셔야지 다음 대통령은 자기가 약속을 한 게 아니니까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약속대로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직 의원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이상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동구·옹진 출신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출신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입니다.

총리님, 제가 경제계에 있을 때는 정치가…… 나오지 마시고요. 정치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여야 의원님들이 저녁식사도 못하시고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국민들이 든든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드신데 제가 오늘 질의를 박재완 장관님부터 해서 먼저 드릴 테니까 총리님 한 20분 정도 시간 계시니까 잠깐 나갔다 들어오십시오.

부의장님, 팬찮으시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부의장 박병석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상은 의원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발 재정위기가 세계경제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인들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마저도 8%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생산, 수출, 소비, 세수 모든 지수가 금년 초 정부에서 목표했던 경제성장률지표 4.7%에 못 미쳐 6개월 만에 경제성장률을 정부는 3.3%, 한국은행은 3%로 조정했습니

다. 하반기 경기가 정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에서는 연말 대선을 두고 복지 문제를 갖고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지예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정부가 대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박상은 의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광림 의원, 나성린 의원과 함께 금년도 하반기 경제 운용계획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박상은 의원 제가 듣기로는 재정 투입을 열린 자세로써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박상은 의원 지금 정부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정 투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2008년도의 미국발 경제위기하고 현재 위기하고 어떻게…… 꼭 그 상황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상당히 단기간에 그 폭이 넓고 또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닥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금융 쪽에서의 문제였었고 지금 이른바 유로존 쪽의 재정위기는 나라마다 조금 그 원인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정부재정이 나빠서 그런 경우 또는 은행들이 부실해서 그런 경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경우 등등으로 복잡합니다만 지난번 2008년만큼 그렇게 폭이 넓거나 아주 깊거나 이러지는 않은 반면에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2008년 것이 단편 소설이고, 이번 글로벌 재정위기는 대하소설이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박상은 의원 2008년도에도 우리가 추경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정부

가 우리 국회보다도 먼저 나서서 추경을 세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박상은 의원 또 2009년도 연이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6개월 만에 두 번 추경을 세웠는데, 현재 상황 인식이 지금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에 너무 걱정을 하셔서 갖고 신중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언론의 보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2008년도에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3/4분기, 4/4분기가 모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도 한 해 전체로 -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던 그런 시기였고, 또 G20 체제가 발족을 하면서 전 세계 각국이 모두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하고 세금은 깎아 주는 그런 이른바 스티물러스 팩키지(stimulus package)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라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G20 회의 등은 여전히 있습니다마는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잘 보시면 모든 나라가 2008년보다는 훨씬 약한 강도로 성장촉진책 또는 경기부양책을 온건한 단계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금리도 아주 급격하게 떨어뜨렸고, 재정은 크게 확대를 하고, 세금도 많이 깎고 이랬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때와는 각국의 정책대응도 대체로 좀 더 온건하고 긴 호흡으로 장기전에 대비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장관님, 저는 조금 인식을 달리 하는데요. 2008년도하고 현재하고 달라진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금년 2012년에는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바뀌는 해입니다. 또 몇 국은 이미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의 변혁기에 정부가 과감한 그러한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싶어도 지금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경우에 아까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하반기에 지도자가 바뀌니까 틀림없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제를 살릴 것이다' 그런 표현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게 대체로 시장에서

의 관측입니다.

○박상은 의원 예,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정부가 워낙 강한 나라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겨우 그것이 인위적인 부양책을 갖다 쓰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경제가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물론 내수경제가 큼니다마는 해외의존도가 크고, 특히 유럽의 지금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그건 간접적으로 한국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마는—그런 문제하고 연관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2008년에 비해서는 훨씬 온건한 정도의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각국이 2008년도에 썼던 부양책의 후유증에 관한 교훈도 얻었다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나라들은 2008년도에 정책 여력을 상당히 많이 소진해 버려서 지금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양책은 사실은 공짜가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또 비용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균형 있게 장기적인 시계에서 잘 보고, 필요할 때 적기에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데 우리만 또 이렇게 과감하게 나갔다가 큰 효과는…… 효과는 좀 있겠습니까마는 기대만큼 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정책 여력만 소진해 버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상은 의원 6월 말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중에서 8조 5000에 대한 집행을 정확히 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부양책은 아니고 정부가 집행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정확하게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그 정도가 GDP의 0.65%인데 그 정도 보장을 하게 되면 연간 단위로 0.25%p 정도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 촉진책임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 2008년처럼 30조씩 이렇게 쏟아붓는 아주 대규모의 부양책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 8조 5000 중에서 내년도 계속 사업 중에서 금년으로 당겨서 하신 것이 있습니까? 조기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해 어차피 예산으로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통상 집행률이 95% 남짓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끌어올려 보자, 그러면 올해도 하반기 성장률이 올라가겠지만 내년 상반기도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인천아시아게임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나갈 것이 금년에 조기, 당겨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300억이……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어차피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박상은 의원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년도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내년도에는 아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박상은 의원 어쨌든 재정의 역할이, 지금 우리가 IMF 위기라든가 지난 2008년 위기가 건전한 정부재정에 공해서 국가신인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넘긴 것이라 보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혹시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실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성장동력을 잃어버릴까 하는 걱정이 돼서……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희들이 꼭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또 상황이 악화가 되고 하면 언제든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 주신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상은 의원 최근에 우리 지방정부 재정이 고갈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 지금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재정 독립 없이는 사실 지방자치가 없는 것인데 지금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전체적으로 광역시의 자치구들이 자립도가 아주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립도가 조금씩 떨어져가고 있는 것은 또 뒤집어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립도가 낮지만 연방제

국가가 아닌 국가들의 경우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방재정 쪽에 재원을 많이 분배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지방분권이 옛날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힘이 사실은 보면 지방정부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동안에 죽 중앙집권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지금 재정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잘 아시는 대로 8 대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두어들여서 다시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배분을 한 결과로 보면 가용재원의 경우는 오히려 4 대 6으로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들을 보면 우리가 한 21% 정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일본이라든지 이런 연방정부가 아닌 국가의 경우 평균 16%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5%p 정도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형량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은 의원**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 정부에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박상은 의원** 거기서 지금 우리 기재부에 권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박상은 의원** 어떤 것들이, 권고사항을 받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알기에 2009년도 도입했던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비중을 좀 더 높이자, 특히 지방소비세의 경우 5%로 돼 있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10%까지 좀 올리자 하는 그런 등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어떠한 결론이 안 났나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시행 3년이 지나서 전면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올해가 전면 검토를 하는 그런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부처끼리 논의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기능을 너무 강화를 하게 되면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 때문에, 재정력이 수도권이라까요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자치단체 중에서도 조금 경제력이 낙후되어 있는 비수도권의 예컨대 호남이나 영남 쪽으로는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지방재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습시다. 아마 저희들이 하나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지방정부들이 어떻든,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의 재정독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향적으로 검토를 할…… 그래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아니요, 저희들도 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비수도권 이런 또 다소 입장이 다른 측면이 있고 해서 상당히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겠다, 제가 지방소득세·소비세 만들 때 사실 관여를 했었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 경험을 잘 살려서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다음에 지금 돈 먹는 민자 SOC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IMF 때 우리나라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많은 SOC를 갖다가 민자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에 국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그래서 정부도 그동안 여러 차례 민자 유치 투자사업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잘 아시는 대로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 같은 것은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박상은 의원** 최근에 광주에서 하나 발생한 그 케이스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 관련 회사로부터 고금리의 이자를 갖고 와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그러니까 자본구조 자체를 타인 자본에 많이 의존하는 형태로 바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영수입의 상당수를 바

같이 좀 빼돌렸다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공정한지는…… 그런 또 논란이 있겠습니까만 그런 의혹 등이 제기가 되었고, 광주시가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서 해당 회사가 불복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또 소송이 계속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18대 국회 때 계속 관심을 갖고, 특히 인천공항에 지금 우리 전 국민들이 접근하려면 인천대교나 공항고속도로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차입선이 제3의 차입선이 아니고 자기네 관련 기업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그렇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이것은 개입해야 된다고 보고, 정부가 결국은 제가 볼 때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지금 정부의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고 제가 알기로는 소송 절차에 쌍방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만 정부도 그런 광주시 사례 등을 좀 잘 살펴 가지고 다른 민자사업에도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할 점이 없는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직 의원이 인천공항 지분 매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박상은 의원 제가 18대 때 그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그렇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런데 지금 그 법안에 다 지금 얘기한 대로 외국인의 소유 제한이 있고, 또 국가가 51%를 갖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주요한 활주로라든가 관제탑은 국가가 갖게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용을 아까 들으시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인천공항 문제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제가 볼 때는 추진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매각대금 중에서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가 종전에 얘기했지만 인천대교나 인천공항고속도로 이것을 정부가 회수하는 데 쓰

면 어떻겠나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매각대금을 그런 주변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료를 낮추는 쪽으로 쓰자는 데 바로 동의해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2013년, 14년, 3단계 확장공사가 될 때 그 건설자금으로 주로 투입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또 생각하신 그런 대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매각을 우선 지분 일부라도 매각을 하고 IPO를 해서 기업공개, 상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양당의 의원님들, 해당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잘 설명을 드리는 게 우선 일의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상은 의원 어쨌든 지금 법을 만들고 IPO를 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현 정부가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정부는 주체가 똑같은 정부니까 어쨌든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흔들림 없이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인천공항이 지금 4500만 쓰는 공항인데 현재 지난 주말에 12만 7000명이 썼습니다. 하루에 13만 명이 쓰게 되면 공항이 사실 4500만이 쓰는 공항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도 좋을 수가 없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제3차, 3단계 사업 투자를 빨리 해야 되고, 특히 접근성을 위해서 양쪽의 민자도로는 국가가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도 공항을 가보면 점점 포화상태에 가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서비스 수준 1위라는 영광을 지키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고 잘 나갈 때, 매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결단을 좀 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상해공항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나갈 때 팔았기 때문에 한 해 운영수익의 30배의 가치를 받고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큰 공항들은 다 지분을 매각하고 전략적 제휴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뜻을 좀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꼭 이 정부에서는 이미 너무 늦어서 어렵다 하더라도 이

것을 꼭 다음 정부에서라도 계속 뜻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은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토해양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이어서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이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세계적인 그런 명물이 됐는데 아직도 지금 우리 영남이나 호남에서 오시는 분들은 접근성이 나쁘다고 그러합니다. 내년 말까지 KTX가 이제 서울역을 통해 들어가지만 그래도 3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수인선이 지금 수원에서 인천역까지 놓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박상은 의원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영종공항까지 연결시키면 영남·호남에서, 부산이나 목포에서도 서울역에 오는 시간과 똑같은 두 시간대에 영종도에 도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인천공항 경쟁력이 좋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게 지난번에 경의선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내년에 사업이 끝나다마는—연결하는 사업을 검토할 때도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가장 사업비를 줄이면서 인천공항에 호남이나 영남도 접근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또 새로운 제안을 하시니까 혹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단순히 영호남뿐만 아니라 영동지방도 이걸 놓으면 현재 평창에 88분에 가는 것을 갖다가 60분 이내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 20~30분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주, 특히 또 우리 영동과 경기 남부지역과 공항까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타당성 검토 얘기하시는데 저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투자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역튼 영동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평창올림픽에 대비해 가지고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결국 우리 SOC는 선택과 집중 아니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박상은 의원 지금 우리 인천공항, 인천항만과 연결되어 갖고 이것이 영호남, 영동 쪽으로 연결 되면 대한민국의 물류가 경쟁력이 생기고, 결국 우리가 앞으로 동북아에서 아주 중요한 국제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아무쪼록 우리가 검토를 더 많이 해야 되겠고요.

특히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뭐 지역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인데 제3연륙교 문제, 이것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우선 그전에 아까 질문 주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영남 쪽의 국제선 타는 분들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경의선 연결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을 들어서 해외로 나가거나 또 인천공항에 왔다가 김해공항에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놓고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3연륙교는 지금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가 현재 예측했던 것보다 수요가 모자라서 지금 MRG를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한 39년 정도까지는 2개 교량으로 수요가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고 또 이제 3연륙교 문제는 결국 그게 되면 기존에 2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한 MRG를 아마 수혜 지역인 인천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저희가 TF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인천시하고 그쪽 민자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좀 더 진행을 시켜 볼까 합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인천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종도에 국가가 30~50만 도시를 만들

겠다는, 국제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장기 비전이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러면 그 섬, 30~50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인천과 또는 중앙정부와 프리 통행할 수 있는 다리를 하나 안 만들어 주고서 국가가 거기에다 비전을 세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아주 장기적으로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 TF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 한번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두 번째는 LH공사가 청라와 하늘도시의 땅을 팔면서 5000억을 받아 가지고 이미 갖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청라하고 하늘도시 주민들이 지금 입주를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이행을 안 한다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잘 알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것은 정부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건 이제 LH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LH가 저희가 감독하는 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걸 떠나서 이게 인천시하고 MRG 부담 문제나 이런 게 확실히 정리가 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가 빨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박상은 의원** 우리 금융위원장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금융권에 갖고 있는 인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뭐 저희 금융산업이 그동안 빠른 시간 안에 상당히 발전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은 의원** 어디 통계에 보니까 5개 금융기관이 세계 100대 은행으로 들어갔던데, 맞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박상은 의원** 그것이 지금 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한 것 아니겠어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은 의원**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박상은 의원** 제가 국회 18대에 들어와서 처음에 한 얘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은행들이 날씨 좋을 때 우산 빌려주고 비 올 때는 우산 뺏어가고 그리고 비가 오는데도 길에서 먼지가 날 정도로 기업들을 팬다.”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인들이 은행에 갖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CD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가계대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법이라든가 기능만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국민감정 또 은행들이 어떻게 컸느냐, 그런 것을 좀 더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날의 우리 금융산업이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그동안 국민들의 많은 희생이 따랐고 뿐만 아니라 IMF 경제위기 이후에 초대형 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을 해서 오늘날 이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응하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국민경제를 위해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세계경기 불황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해운업계입니다.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박상은 의원** 지난번에 우리 선박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해운업계를 도와주고 또 우리 국부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선박계가 나빠지면 배값이, 우리가 결국 해외에 팔아야 되는데 혈값에 팔아야 됩니다. 경기가 좋으면 다시 또 비싼 값에 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부가 유출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박펀드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이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는 세계 7대 수출국가고 10대 무역국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운산업도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때 그러면 선박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은 저희가 구조조정기금이나 선박펀드를 통해서 이런 지원도 했고 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통해서 지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선 해운사에서 자체적으로 세계적인 물동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박량 추이나 운임 추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안이 되겠고, 우선 일차적으로는 우리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희 정책금융기관으로서도 구체적인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가계대출 관계도 지금 결국은 우리 서민들 금융이기 때문에 또 주택문제는 요즘 국민들이 복지, 주택도 복지의 일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그런 측면들이 있지요.

**○박상은 의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지난 2년 동안 13조밖에 안 줄었더구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떤 복안을 좀 갖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많이 하시던데.

**○금융위원장 김석동**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초부터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대책을 한꺼번에 강력하게 추진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실물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서민가계가 어려워질 수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서 속도조절을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다만 이 가운데서 지금 서민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민금융 쪽에 어제 또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점검을 해서 제때에 대응을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이것을 꼭 좀 책임지셔야 됩니다.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은 현재 우리 경제 현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오늘 기재부장관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하튼 대외여건 때문에 하반기에도 낙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따라서 금년도 성장률도 지금 얼마 전에 좀 낮춰서 잡고 해서 저희가 바짝 긴장하고 챙겨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경제성장 동력 관계해서 지금 수정법 철폐 문제……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상은 의원** 수정법, 우리 수도권정비법.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상은 의원**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사실 주택경기,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서민경제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와 연결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의견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수도권 정비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지방 출신 의원님들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여하튼 기본적으로 서로 상생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목표를 갖고 수도권 경우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이런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은 지역 특성을 살리는 특색 있는 또 그런 지역으로 살려내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래서 지금 대외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내수를 진작시켜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하튼 건설경기를 포함해서 부동산 거래가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 하는 절실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참 빠른 방법, 좀 좋은 의견 좀 내놓아라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여하튼 부동산 거래 활성화하고 관련해서는 국토부장관도 보고를 하고 재경부장관도 보고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부동산 과열됐을 때에 생겼던 규제에 관

한 정책들은 다 풀고,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으니까. 그것 중의 하나가 이제 상한가제도라든지 다수 주택의 양도세 중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도와주셔야 하는 문제고요. 입법과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참 살살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내일 오후 3시에 또 경제장관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 경제관련된 분들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반기 경제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난상토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방안도 얻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뭐 정확히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이 경기 진작의 가장 핵심이 부동산과 주택 경기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라구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상은 의원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 경쟁력 있는 데가 수도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전체뿐 아니라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지역만 풀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수도권에 그동안에 가해졌던 규제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또 특히 융합발전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그렇게 완화해 가는 그런 방침입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지방과 균형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은 의원 어려운 시기인데 총리께서 힘내서 가지고 경제 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의 민주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국 경제의 민주화가 뭐겠습니까?

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패권주의와 좌우 이념대결의 낡은 틀을 버리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금의 국제 경

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이루어내 주시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석 박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 출신의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

저는 충남 공주 출신 민주통합당의 박수현 의원입니다.

저는 며칠 전 고속버스 안에서 몇 명의 고등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고등학생들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국 고등학생들의 인식 조사를 하고 또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위해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어린 고등학생들이 이처럼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 열심히 나서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보여준 활동보고서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존경하는 민주당의 김재윤 의원과 김영록 의원님께서 “5·16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총리를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분명히 5·16은 군사 쿠데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께서 교과서에 실린 이 사실의 문제를 판단의 문제라 말씀하시고 정쟁이라 말씀하신 데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쿠데타라는 역사적 사실을 판단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체가 정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이 격언을 가슴 속에 꼭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총리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아랫목은 절절 끓고 윗목은 떠다 놓은 물도 얼어버릴 정도로 냉골인 그런 방에서 살아 온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에서 가족의 건강이 지켜질 수 없듯이 수도권은 과밀화되어서 터져 죽고, 지방은 공동화되어서 말라 죽는 현재의 국토 구조하에서는 진정한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생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2008년도에 수도권 산업단지 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리님, 그 뒤에 지방으로 이전하던 수도권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기 시작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대책 발표 이후에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의 기업 수가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그 통계를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2009년 대비해서 매년 한 40% 정도 숫자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신규로 생기는 공장 수는 또 그에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예,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의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의하면 509개이던 지방이전 기업이 2010년에는 254개, 2011년에는 160개로 반 토막이 아니라 세 토막 이상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균형발전이 중요한데 지방을 피해하게 만드는 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바로 이 정책을 도대체 왜 그동안의 국토 관리의 기초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채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고, 차제에 이 국토관리정책의 기초를 다시 그렇게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 중앙과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발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요. 지역의 경우에는 특성화된 그런 지역 특유의 그와 같은 발전 방안, 또 수도권의 경우는 다른 세계의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분리해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분들이나 또 지방 출신 의원님들께서는 그에 관해서 중앙과 수도권과 지방이 너무 균형이 깨뜨려져 있는 그리고 경제력의 편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저도 그러한 점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어느 쪽을 편 들고 어느 쪽이 이익이 되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전체적인 국가 발전 그리고 국토 내에서의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코 지방이 위축되거나 홀대받는 그런 정책은 쓰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의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수현 의원** 어쨌든 지금까지 과밀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수도권의 피해 문제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하면서 이제 진정으로 지방도, 지방민도 수도권 주민처럼, 수도권처럼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끼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수도권에서만 아니라 지방에서 더 잘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세종시 문제 그밖에 혁신도시 이러한 사항들이 잘 진행이 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더 균형발전의 큰 틀이 잡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수현 의원**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공간 불균형으로 야기된 권력의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국토 관리 기초로서 공간 민주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야의 대선주자들에게도 이 공간 민주화 정책을 공약에 담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하면서 총리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어서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세종시는 충청의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국가의 과제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정상 건설과 주변지역의 상생

발전, 이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19대 국회 300명 국회의원 전원의 책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박병석 부의장, 강창희 의장과 사회교대)

총리께서는 세종시의 정상 건설과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을 책임지셔야 하는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 의원 지금까지 세종시지원위원회를 몇 차례 여셨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몇 차례인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제가 직접 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수현 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한 두 차례 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총리께 차제에 이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좀 정기적으로 자주 열고,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세종시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기왕에 시작한 정책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이고 핵심으로써 잘 기능을 함으로써 지방 발전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세종시에 관련한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07~2015년까지인데, 지금 이 사업기간은 절반 이상 지났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예산을 보면 39.96%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3개년도가 남았는데, 그중에 보면 단순하게 계산해서 매년 1조 20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1단계 사업을 기간 안에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확보의 추이를 보면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확실히 2015년 안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9800억 정도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례로 보면 2015년까지 마치는 것이 의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상 2014년, 15년도에 건축 공사나 필요한 공사가 완공되는 것들이 많이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적으로 평균적으로 비교하면 내년에 다소 부족하지만 그

부분은 2014년, 15년에 집중적으로 건설·건축이 완료되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수현 의원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본 의원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2014년까지 36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전부 이전·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2013년과 14년에 예산의 집중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980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것은 단순 수치로 1조 2000억 정도가 확보되어야 되는 단순계산에도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수현 의원 그리고 충청남도과 공주시 그리고 충북 청원군, 다시 말해서 편입지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들은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대의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생활과도 같은 땅과 인구나 세금을 떼어서 세종시가 잘 만들어지도록 기여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의 주민들은 공동화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리께서도 아시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런 걱정을 하시는 주민들이 계실 것입니다.

○박수현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 정책에 적극 협력한 편입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화되지 않도록 세종시와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걱정을 잘 헤아려서 함께 상생발전대책을 잘 추진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그를 위해서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 번 봐 주시면요, 세종시특별법 제11조에 보면 “행·재정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세종특별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세종특별자치시 자체에 관한 것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편입지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리님. 그렇기 때문

에 이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일부 편입지역 자치단체’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아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함께 또 재정손실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부운용을 위해서 재정특례조항을 신설해서 매년 추가로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데 그 법 3조에 보면, “국가는 세종시와 인접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으로서 일부 편입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현행법에 의해서도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본 의원이 더 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세종시를 정상 건설하고 주변을 상생발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종시 중장기발전방안을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결론을 지난번 지원위원회에서 보고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접 지역 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상생 문제까지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 장치 등을 잘 활용을 해서 이게 자족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까지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일은 정부에서 틀림없이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차원에서 혁신도시에 관해서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혁신도시도 지금 지지부진한데 이것을 집중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도시건설청과 같은 혁신도시건설청 같은 조직이 지금 신설돼서 추진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점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혁신도시도 여러 군데 가고, 기공식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또 건축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들은 잘 챙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따로 청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의견입니다.

아무튼 혁신도시가 다소 지연되는 면은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원래 관청이나 청사들이 팔리지 않아서 좀 지연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지연되더라도 지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 단위를 따로 만드는 문제하고는 관계없이 성공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총리와 정부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총리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국토부장관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도 없을 것이지만 본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저렇게 열 가지로 종합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 아시는 문제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 의원은 입찰 담합으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와 부실 공사에 따른 보의 안전성 문제, 두 가지를 집중해서 장관님께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장관님, 이게 18대 국회에서도 두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민간 건설사의 담합 문제와 그다음에 국토부도 그 과정에 혹시 개입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혹 두 가지가 18대 국회에서 제기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조치에 의해서 민간 건설사끼리의 담합은 확인이 되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박수현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로 이 민간 건설사의 담합 과정에, 그 과정을 국토부가 알면서도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알면서도 방조했거나 묵인했거나 혹은 국토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박수현 의원** 그렇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박수현 의원** 그러면 제가 그 정황 증거로 낙동강 24공구 칠곡보의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009년 8월 국토부는 칠곡보 준설량을 당초 3500만<sup>m</sup>에서 1870만<sup>m</sup>로 축소하는 입찰 재공고안을 비공개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입찰에 참여한 업체인 대우건설이 준설량을 이 비공개 지침인 1870만<sup>m</sup>로 축소하겠다는 변경 제안을 해서 이 변경 제안이 바로 높은 평가를 받아서 그곳이 낙찰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내부 비공개로 검토한 이 1870만<sup>m</sup>, 대우건설에서 죽집게 도사를 직원으로 특채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것을 정확하게 변경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금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게 국토부가 내려 보낸 공문인데요. 여기에 “비공개”로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1870만<sup>m</sup>라고 하는 숫자까지 정확히, 100% 일치시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사전 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 부분은 내부의 감사도 거친 바가 있습니다마는 칠곡보 입찰공고 후에 저희가 이제 준설량이 과다해서 사토 처리가 곤란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설물량을 축소하면서 대우건설에만 그것을 알려준 게 아니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3개 업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개 업체 모두에 준설량 축소 자료를 다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상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수현 의원** 그러면 장관님, 좋습니다. 그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대립과 다른 건설사도 같이 했지요? 같이 정보를 알려 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중에서 대우건설만 유독 그렇게 변경 제안을 했지요? 다른 두 회사는 왜 변경 제안

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담합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아니, 그것은 담합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 경위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4대강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감사원 감사도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감사원 감사 시에 적발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적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누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수주 경쟁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낙찰자가 선정됐는데 어떻게 다른 두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공구별로 민간 건설사를 미리, 속도전을 치르기 위해서, 정해 놓고 나머지가 들러리 섰다라고 하는 명확한 담합의 증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것은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삼척동자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같은 자료를 다 제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박수현 의원** 그러니까 장관님, 어쨌든 꼭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의심할 수 있겠지요? 입찰에 참여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것은……

○**박수현 의원** 다른 두 회사는 아무 조치도 안한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하고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의원** 어떤 사실이 다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에 대해서 사후에 저희가 준설 물량이 과다하다는 것을 발견해서 똑같은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의원** 그러니까 장관님, 다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관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들으

셨다면, 3개 업체가 치열하게 경합을 했는데 정보를 똑같이 알려 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대우건설처럼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응해야 입찰에 참여했던 회사로서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두 회사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담합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담합이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담합 부분은 질의하신 대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해서 이미 조치를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수현 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담합도 담합이고, 바로 4대강 사업을 임기 안에 맞추기 위해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담합을 방조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입찰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업체 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담합이나 뇌물 같은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또 단속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턱입찰시에 감점을 해서 확실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오늘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제가 한번 다시 짚어는 보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의원**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다음에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박수현 의원** 다음에 보의 안전성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몇 가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금 4대강 공사 전체 공정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전체적으로는 96% 정도 되고요, 지금 본류는 99%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이게 원래 작년 10월에 완공하려고 그랬다가 12월, 올해 3월, 6월, 계속 완공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왜 그

렇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10월은 저희가 개방하는 기간으로 정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 개방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 준공 시기는 사실 당초부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 경우에는 대부분 보가 준공이 되었고, 수공에서 인수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지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엣그제 제가 낙동강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실로 인한 보강공사,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 공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림처럼 저런 심각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각별하게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걱정하는 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을 대량으로 시공하다 보면 한꺼번에 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음매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주댐이나 합천댐 같은 경우가 콘크리트 댐인데 충주댐 같은 경우에는 설계 기준에서 아예 분당 900ℓ까지 누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누수량은 한 40ℓ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와 관련해서는 그런, 기능상으로 설사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미관상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다 했고요.

또 구조체 자체가 암반이 가까이 있는 지반에서는 암반에 기초를 두고 보를 건설했고, 퇴적토가 아주 깊어서 암반에 바로 건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바위를 암반까지 박아서 그 위에 건설했습니다. 흡사 강에 교량을 건설하는 때하고 같은 공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의 기능이나 안전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보에서 떨어지는 물이 낙차가 있기 때문에 그 낙차하고 관련해서 하류에 세굴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굴현상도 사실은, 보를 만들기 전에도 낙

동강 일부 구간에서는 40m까지 깊이 세굴이 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의 기능에 영향은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함안보하고 합천보 같은 경우에 보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보니까 보완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물의 흐름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퇴적이 그 위에 몇 미터씩 되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의 흐름 과정 속에서 항상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관리는 해나가겠습니다마는 보의 기능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의원님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하셨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보 자체의 안전 얘기를 하는데 한번 현장에 가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까지 한 750만 명이 현장을 다녀갔습니다마는 더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 안전성이라든지 또는 효과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UNEP나 OECD나 이런 데서는 다 이게 아주 시범적인 성공 사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걱정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수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분명히 달리하기 때문에 장관님께 한 가지 제안합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된, 그래서 그런 검증위원회, 조사단을 구성해서 이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할 의지가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동안에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전문가를 동원해서도 여러 차례 점검을 했고 또 감사원 감사도 거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이나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 준공이 돼서 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이 부분을 점검을 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리를 더 제대로 해서 국민들이 그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장관께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잘 하겠습니다.

○**박수현 의원** 총리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의혹을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실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국토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간에 국회 그리고 또 감사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호수가 큰 산을 담을 수 있는 것은 호수가 넓고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산과 같은 이 많은 사회적 문제, 우리 19대 국회의 맑은 영혼과 정신으로 이것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박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 출신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 제가 박수현 의원과 같이 충남 출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당진 출신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의 눈으로 본 국회의 인상은 좀 감격적이기도 했지만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부에서 지방과 중앙을 오가며 31년을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여 잠들어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미안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생활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가 어려운 선거 과정을 거쳐 국회에 등원하여 처음 겪은 것은 개원하지 못하는 국회, 세비 반납이었습니다. 31년간 월급으로만 살아온 저희 가족으로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겨우 개원되어 여야 원내 대표님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느꼈

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대표님은 “국회의 개원이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민주통합당 박지원 대표님은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회를 열자고 여당을 쫓아다니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들면서 개원을 지연시켰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은 모두 상대에게 있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점은 무리했지만 이러이러한 점은 아쉬웠다, 앞으로 잘 해 보자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치 원로들이신데 모르실 리는 없을 것 같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수첩에 적었습니다. ‘여야 간 불신의 벽이 높구나!’ 여야 간 불신은 감정적인 표현을 쓰려 할 것이고 이는 갈등을 키워낼 텐데 19대 국회도 18대와 마찬가지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절망을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안정적인 공직을 버리고 지역에 내려가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은 “싸우지들 마라”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 단추를 너무 무겁게 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너무 소중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직 국회에 익숙하지 않은 초선 의원들에게 꿈을 키워 주십시오. 여야가 상대의 작은 허물은 이해해 주시고,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말하며 행동도 서로 따뜻하게 대해 줄 수는 없을까요? 여야가 서로 갈등을 키워 간다면 우리 사회에 극단주의가 크게 성행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극우에게 맡겨져서도 안 되고 극좌 세력에게 맡겨져서도 안 됩니다. 오직 국민복을 위하여 여야가 정책 경쟁을 하되 상대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신사협정을 하면 안 될까요? 감히 초선 의원이 간절히 호소합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지금까지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경제민주화 정책 중 경제력 집중과 남용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한 축으로 시장 속에서 경제적 약자의 경쟁 기반을 강화하는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식량 안보의 기준 설정과 농어업의 지속적 투자이고, 둘째는 농어촌 주거구조의 집단지화·공동주택화이고, 셋째는 이를 가장 가까이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건실화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는 우리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물려줄 수 있는 많은 정책 중의 하나라 생각되어 총리님과 기획재정부장관님, 농림식품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개방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을 토대로 농어업 기반의 퇴락을 방지하고 농어업의 후계 인력 양성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사용하고자 하는 식량 안보는 지금 정부에서 사용해 온 식량 안보라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정부는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식량 안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물이 끓어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100℃를 임계온도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즉 안보의 임계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계선 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여도 임계선을 넘어선다면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식량 또한 수입에만 의존하다가 기후변화나 국제적 분쟁으로 수입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몇 가지 식량은 못 먹더라도 포기하고 버틸 것이고 핵심 식량도 그 소비량을 줄여 버틸 선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어느 선이 있을 것인데 본 의원은 그 임계선이 식량 안보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중동 지역에서 자스민 혁명의 영향으로 튀니지와 알제리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29년간의 이집트를 철권통치 해 왔던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중동 국가들의 경우 2011년 초 곡물 가격이 폭등하여 식량이 부족해지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국민들이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국민 생존의 임계선인 식량 안보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총리님께서서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국가 생존을 위해서 지금 지

적하신 바와 같은 유사시에 필요한 식량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FAO에서는 비상시에 최소한 2개월분의 식량은 항상 확보해야 된다고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대략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쌀은 100%가 넘지만 다른, 곡물 자급률 그리고…… 사료까지를 포함한 자급률은 한 27%인데 사료 부분을 뺀 자급률은 한 50% 좀 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그게 지금 현재 떨어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높아지는 추세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게 지금 정체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그런 것이 나중에 막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가 떨어져도 괜찮다고, 우리나라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국무총리 김황식** 우선 최소한도 쌀은 100% 자급하는 그것은 언제든지 확보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완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쌀도 농촌인력이 고령화해서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우리 김영록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있었던 용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 투자되고 있지 않아서 아마 농토도 10여 년 흐르게 되면 아주 많이 훼손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식량안보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어느 선까지 투자해야 되고 어느 선까지 인력 양성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김동완 의원** 총리님께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식품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총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버틸 수 없는 식량안보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지금의 농업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한의 농업 투자 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들의 인력은 어떻게 양성할 것

인지? 지금 30대, 40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저도 동감입니다.

○**김동완 의원** 우리가 이러한 식량안보 기준 없이 그저 농산물에 문제가 있으면 수입해다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개방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저희들이 80년도 냉해가 들어서 한 29% 감소가 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 쌀 생산량이 79년도에 556만t 됐는데 80년도에 355만t, 한 200만t이 모자랐어요. 그러면 200만t만 수입하면 되는데 쌀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가수요가 붙어 가지고 331만까지 수입을 했습니다. 국제가격이 2.5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식량, 쌀 만큼은 충분히 자급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김동완 의원** 만약 지금과 같이 우리가 농산물을 수입해다 먹고 계속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방치를 한다면 10~20년 뒤에 우리 농어촌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지금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료곡물을 합하면 27.6%, 사료곡물을 제외하면 한 54%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2020년까지 사료곡물까지 포함해서 한 32%, 합하면 한 60% 이런 수준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보고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농업 투자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력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든 산업이라든가 모든 기업 이것은 사람이 경쟁력이거든요. 지금 사람이 60대 이상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라는, 농수산업이라는 것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계자를 젊은 사람들을 한 2500명 매년 농촌에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귀농 귀촌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정책 브랜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농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그냥 우리가 과연 54%가 걱정인 것인지 따져보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그래서 저희들이

60%까지 올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동완 의원** 예,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한 투자라든가 또는 사람의 양성이라든가 저는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그렇습니다.

○**김동완 의원**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만약 식량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자급률을 높이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맞습니다.

○**김동완 의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완 의원**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문제는 사실 농림식품부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앞서 우리 민주통합당의 김영록 의원께서 질의할 때도 그런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만 이것만큼은 우리 여야가 국회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어촌의 공동체는 점차 해체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님 생신 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침에 동네 어른들을 초대해서 식사대접을 다 마친 다음에 저를 낳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마을 공동체가 잘 발달되었던 나라였습니다. 마을에는 굶는 사람이 없었고 재난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70대도 지금도 60대 이장과 부녀회장들이 경로잔치를 해 주고 어르신들이 아프면 병원도 다녀올 만큼 마을 공동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생각해 보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로 되는 나라에서 홀로 굶주리는 노인, 외로워 자살하는 노인, 아파도 보살피줄 수 없는 노인, 죽어도 며칠씩 발견되지 않아 전염병이 발생하는 우리의 농어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의 농어촌은 고령화로 독거노인과 빈집만 늘어나고 있어 자식들만 쳐다보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로당이 위안이 됩니다만 기름값이 부족해

서 낮에만 갔다 귀가하여 집으로 돌아와 군불을 때고 전기장판에 의존하여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전기배선은 30~40년이 되어 낡았고 난마처럼 얽혀 있는 전깃줄은 언제 불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몸이 아파 누워 있는 노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가기도 합니다만 자식들 때문에 방문요양 서비스로 버티는 노인도 많습니다. 정부는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보살피고 있습니다만 그 손길이 충분치 못해서 도시에 나가 있는 자식들은 전화로만 걱정하다 주말에 들여다보느라 고속도로가 온통 체증을 빚습니다. 이러한 농어촌의 문제는 노인들에게 절망이 되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농어촌에서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보도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서는 이런 농어촌의 실정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동완 의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총리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도시화로 인해서 농촌이 공동화 또 피폐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식품부장관도 말씀을 했지만 귀농 귀촌을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농촌 농업 승계인, 영농 승계인들을 지금 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화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전제로서 농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농촌의 여러 가지 주거라든지 시설이 확충이 돼야 또 그러한 여건이 마련이 돼야 귀농 귀촌도 활성화되고 농촌이 살아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김동완 의원** 그래서 저는 그러한 농촌 주거 구조를 좀더 집단화하고 공동주택화하는 일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한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공동화하고 집단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완 의원**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우리 농촌의 주거 구조는 고비용 복지를 초래하고 있고 에너지 비용도 아주 높게 초래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를 그렇게 풀어 나가고 나면, 지금 전

후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 아까 걱정이 있었는데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내려와서 같이 마을 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림부에만 맡겨질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범정부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도 농어촌정비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또는 그 법을 조금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별도의 특별법이 이것과는 별도로 필요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완 의원 제가 전문가들과 함께 그 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깐 그 법이 남긴 것은 농어가 부채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 가지고는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 예, 제가 특별법을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은 들어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장관님, 아주 영·유아 보육 문제 때문에 요즘에 골 아프시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다들 힘드시니까 제 머리 아픈 것은 괜찮습니다.

○김동완 의원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장관님께서 잘 챙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이들의 보육 문제를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지방재정이 고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부동산 대책 활성화를 내놓으면서 지방세의 주요 세목인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김동완 의원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김동완 의원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정부의 정책 속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분이 50%에서 40%로 1년 미만 것은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부동산을 정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대폭 낮춰도 되지 않겠느냐, 양도소득세의 목적은 국

가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했던 것인데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대체로 1세대 1주택이 많으시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인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특히 지적하신 대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투기가 재연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김동완 의원 그래서 제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지금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보면 지방재정이 부실하게 되면 대단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방재정에 대해서 일본 동경대학교 교수가 세미나에서 발표하기를 국고보조가 많이 높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적으로 국고보조되는 만큼 자기 코스트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 투자가 된다는 모럴 해저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동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동완 의원 저는 그래서 지방세 부분을 더 확충해 줘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책임성 있게 하게 하지 않으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아까도 잠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연방제형 국가가 아니고 단일국가의 경우에 지방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3%입니다. 우리나라는 21% 정도이기 때문에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5%p가 현재도 높은 상황이고 OECD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세출에 대해서는 분권을 강화를 하되 세입에 대해서는 분권보다 집권을 강화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균형 있게 해야 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완 의원 저는 그 세출의 방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 모럴해저드가 발생할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 재정 요구를 무한대로 할 거라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런 점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고, 여전히 우리 자치단체들의 채무 수준은 경쟁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은 낮은

상황입니다마는 늘어나는 복지 지출 등으로 인해서 빠르게 악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완 의원** 그런데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게 해야 taxpayer(납세자)들의 컨트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9년에 통과되어 가지고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도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과 사실은 대응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사무실 주소지와 본인의 주민등록지 사이에 지방소득세의 괴리가 있고 또 거주지와 소비지 사이에 지방소비세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더 지방 세원이 들어오는 그런 인센티브 기제를 좀 더 다듬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 큰 방향에 동의합니다.

○**김동완 의원** 제가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제가 그때 재정과장을 하면서 연구를 해 본 것은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그런 세수의 격차는, 우리가 재정조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세출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세출의 자율성을 차별화해서 자치단체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면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큰 방향에 동의합니다.

○**김동완 의원**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감사합니다.

○**김동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회적 갈등이 OECD국가 중 가장 큰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에서 있는 것이 정치권입니다. 이제 여야가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며 합리적 토론을 통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국회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국회를 만들어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이 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김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경기 의왕·과천 출신의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창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 송호창입니다.

저는 시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함에 있어서도 특히 시민과 중산층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 질의가 정략적인 공격이 아니라 시민들의 상식으로 생기는 의문으로부터 생기는 그런 질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음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괜찮습니다.

○**송호창 의원**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든 분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불행히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서민경제는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빛을 내서 집을 샀던 서민들은 부채의 늪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습니다. 빛을 내서 그 빛을 돌려 막기에도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채시장으로 내몰렸던 사람들은 살인적인 고금리를 이기지 못하고 전과자가 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4시간 문을 열어 보지만 인근에 들어선 대형마트 때문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재벌의 횡포 앞에 어디 호소 한 번 제대로 못해 보고 쓰러져 갑니다. 반면 지난 5년간 재벌의 경제력은 엄청나게 집중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유도하는 대로 대출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따라갔던 서민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절대 다수인 가난한 서민과 극소수의 부자 간의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이러한 민생경제 파탄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못 낸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창 의원** 이렇게 과탄이 된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정부 정책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부가 서민의 입장에서 민생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몰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에 몰두했는지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책임을 지고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호창 의원** 총리가 통할하는 행정부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총리는 그 공무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는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송호창 의원**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물론 사안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창 의원** 예. 총리께서는, 오늘 오후 우리 민주당 김영록 의원께서 ‘박정희의 5·16이 군사 쿠데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총리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므로 정치권의 논쟁에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호창 의원** 총리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는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될 책무는 당연한 것입니다.

○**송호창 의원** 그러니까 왜 그런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총리가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게 되면 이것은 사회 갈등을 야기를 하고, 특히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 공무원이 그와 같은 중립성에 어긋나는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

니다.

○**송호창 의원** 사회 갈등보다도 일단 공무원은 행정부에 속하는 것이고 명백하게 가장 무엇보다도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중립적 위치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호창 의원** 결국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법률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송호창 의원** 총리가 통할하는 행정부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리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같은 사안이 어떤 사안이며, 말하자면 위법한 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그 위법한 정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창 의원** 위법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호창 의원**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는 2004년 3월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해서 중앙선거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고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호창 의원** 탄핵소추가 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도 정지가 됐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호창 의원** 그리고 고건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도 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호창 의원** 대법관까지 했던 분이기에 때문에 이렇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헌법재판소의 당시 결정을, 정확히 워딩을 지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송호창 의원**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호창 의원 그러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적 의무 위반은 대통령을 탄핵소추 시킬 정도로 중대한 그런 헌법과 법률 위반, 이런 범법 행위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송호창 의원 그러면 총리는 지난 2012년 4월 5일, 이번 총선을 바로 앞둔 시점에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 공약, 복지 공약을 특정 부분에 한정해서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복지 공약 실현성이 낮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야 정당에서, 당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재정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하는 그런 추계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창 의원 민주당의 복지 공약 실현하기 위한 추계 예산이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예산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던 거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하여튼 그때 발표한 것은 정당 구분 없이 복지 공약 전체의 소요 수치를 추계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창 의원 그러니까 추계를 했는데 민주당 공약에 대해서는 복지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던 것은 기억이 나시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

○송호창 의원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당시 박재완 장관의 발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이런 박재완 장관의 행위는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 둔 시점에서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 하고 경고를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창 의원 중앙선관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재완 장관은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TF팀을 만들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TF를 만든 것으로 압니다.

○송호창 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한 것이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호창 의원 당시 중앙선관위는 ‘탄핵 사유가 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 때보다 죄질이 훨씬 좋지 않다. 당시에는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선관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처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가장 경계할 부분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잘못됐다는 지적은 있는 줄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내용을 담았는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송호창 의원 당시 한 언론에서 4월 6일 자 기사로 발표된 그런 내용입니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박재완 장관뿐 아니라 TF팀에 참가했던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게 TF팀으로서는 우리 국가 장래에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호창 의원 TF팀 구성에 대한 그림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당연히 검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표했을 때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송호창 의원 TF팀 구성 그림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TF팀은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교과부, 보건복지, 여성가족, 고용노동, 행정안전, 거의 모든 경제 관련 부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중앙선관위는 발표를 했고 또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부가 각 정당의 복지뿐만 아니라 안보·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에 관련해서 각 부처가 나서면서 공정한 선거가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관권선거가 극심했던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총리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선거관리위원회의 그와 같은 판단은 당연히 총리로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창 의원 중앙선관위가 국무위원을 향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이전에도 경고한 사실이 있는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창 의원 처음입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을 한 박재완 기재부장관에게 행정 각 부를 통괄하는 총리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선 복지……

○송호창 의원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선관위의 그와 같은 지적이 있고 박재완 장관이 저한테 죄송하다 말씀을 하면서 ‘관련된 모든 조치는 총리님께 맡기고 그에 순응하겠다’ 이런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송호창 의원 ‘죄송하고, 순응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호창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박재완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이 복지 TF팀을 ‘대통령선거 때까지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재정 소요가 수반되는 그러한 공약들이……

○송호창 의원 재정 소요가 수반되는데 이런 TF팀을 만들고 운영하면 재정이나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TF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돈이 드는 내용은 아니지요.

○송호창 의원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총리 말씀대로 하시면 박재완 장관은 총리에게는 와서 ‘죄송하다,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뒤에 언론에 가서는 ‘앞으로 이후 연말 대선 때까지 이 TF팀을 유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다는……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발표를 만약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정확히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런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복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되고.

다만 정부 내에서는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재

정 소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을 한번 검토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동 내지 조치를 안 하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송호창 의원 2004년 당시에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 시켰던 법률 위반입니다. 그런 정도로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적인 TF팀 운영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지금 언론에 공표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러한 조치, 그 TF팀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요, 가령 여당에서 어떤 복지를 이 규모로 확대를 하겠다 하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을 때 그러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재정 소요가 어떻게 필요한지 하는 것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업……

○송호창 의원 발표를 하는 것은요?

○국무총리 김황식 발표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정책에 반영하느냐……

○송호창 의원 그 내부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TF팀이 꼭 필요한 건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TF팀이라는 것은, 복지라는 것은 어느 한 부처의 소관이 아니고 저기 보건처부터 여성가족부까지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주무부서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그런 문제들이 전부 검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송호창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지경부장관의 범법행위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기재부장관요?

○송호창 의원 예.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계실 겁니다.

○송호창 의원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대통령께서 어떤 조치를 취한 바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송호창 의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오후에 우리 민주당 이상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위원이 유력 대권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이렇게 답하신 바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송호창 의원 그런 태도를 이후 질문에도 계속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송호창 의원 왜 그렇게 답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지난번 선관위 TF……

○송호창 의원 아니요, 이상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유력 대권 후보 행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답하신……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아까 질문에는 그 대권 후보가 발표한 정책의 의도라든지 배경, 종래 했던 입장과 좀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 후보가 어떻게 해서 종전에는 그런 입장을 취했고 지금은 또 이런 입장을 취하는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송호창 의원 아, 몰라서 얘기하신 건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다, 그리고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송호창 의원 그 TF팀 운영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지 않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복지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과 요구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재정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전체 재정 소요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봤고 그것이 책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2월 달에 한 번 양당 공약을 합쳐 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공약들이 일부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발표한 것이 좀 숫자가 바뀌었는데 이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 하는 차원에서 선관위하고 실무 협의를 해 보니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라 그래서……

○송호창 의원 그 질문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희들이 아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양당을 적시하지 않고 합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송호창 의원 예, 그 문제는 뒤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시에 그런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한 페이지짜리 문서가 우리가 4월 달에 발표하고 나서 왔습니다.

○송호창 의원 그 경고를 받았는데도 계속 그런 선거법을 위반하는 공표를 계속 하신 이유가 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아니, 4월 달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선을 얼마 안 앞둔 시점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나서 문서가 왔습니다.

○송호창 의원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4월 5일 날 중앙선관위에서 발표를 했고, 이런 선거법 위반이라는 발표를 했고……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게 처음입니다.

○송호창 의원 그 사유를 얘기를 하면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경고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부처를 동원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앙선관위의 발언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저희들한테 중앙선관위에서 딱 한 번 문서가 왔습니다. 4월 달에 왔습니다.

○송호창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언론에 발표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보다 그 위법성이 덜하다고 생각합니까, 더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희는 발표하기 전에 선관위 실무진하고 협의를 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 달라 해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발표는 제외를 했고요, 또 양당을 각각 공약 소요를 발표를 하게 되면 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양당을 합쳐서 모두 이행하려면 총 돈이 얼마가 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송호창 의원 그러면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 때보다 죄질이 훨씬 좋지 않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송호창 의원 그리고 이번에는 정부 부처를, 선관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처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송호창 의원** 처음 듣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받은 문서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송호창 의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것은 어떤 개인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송호창 의원** 장관께서 이 문제가 된 4월 5일에 발표를 하기 전에 이런 발표를 하겠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없습니다.  
○**송호창 의원** 그러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침을 받고 발표를 한 겁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런 적은 없었고요.  
○**송호창 의원** 보고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혼자서 하신 건가요, 결정해서?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우리 TF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송호창 의원** 그러면 TF팀에서 장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송호창 의원** 사전에 할 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저한테는 보고를 했고요.  
○**송호창 의원** 해서 발표를 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였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송호창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의 원인이 된 이 복지TF팀의 구성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지 않습니다.  
○**송호창 의원** 그러면 누가 이것을 만든 건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우리 기획재정부는 상당히 맡고 있는 업무가 많아서 어지간한 것은 사실 독자적으로 일을 하고요……  
○**송호창 의원** 그러면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시작이 된 겁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호창 의원** 어떤 목적으로 만든 기구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 TF팀을 구성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복지공약, 또는 복지사업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정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소요 재원을 추계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송호창 의원** 좀 전에 말씀을 하실 때 그 발표를 하기 전에 중앙선관위에 보여줬더니 조심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실무진에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송호창 의원** 그러면 일단 발표를 하기 전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되지 않도록 하라는 언질을 받고, 그다음에 발표를 한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송호창 의원** 그랬는데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경고를 받은 것이고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선관위는 합의제 조직이니까요. 일개인이 와서 의견 얘기하는 것을 존중은 하지만 일단 실무선에서 얘기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양당 공약을 구분하지 말고 뭉뚱그려 하자,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말자. 그리고 레인지(range)가 있었습니다, 원래. 최소 금액·최대 금액이 있는데, 최소 금액만 발표하자 그렇게……  
○**송호창 의원** 그러면 중앙선관위는 왜 경고를 한 겁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송호창 의원** 왜 경고를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것은 합의제 기구니까 전체회의를 열어 가지고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송호창 의원** 그래서 경고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뭐 제가…… 그렇습니다.  
○**송호창 의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제가 선관위의 내부 프로세스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송호창 의원** 경고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경고까지 받은 상태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고를 받은 뒤의……  
○**송호창 의원** 지금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경고는 한 번밖에 안 받았습니다.  
○**송호창 의원** 아니, 발표를 하기 전에 검토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서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고.

○**송호창 의원** 알겠습니다.

TF팀을 만든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복지 공약 관련해서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추계예산이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없습니다.

○**송호창 의원** 그 발표 언론기사가 나온 이후에도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 내용 자체는 보고를 드린 적이 없고요, 그냥 말씀으로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송호창 의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선관위로부터 저희들이 오해받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송호창 의원** 그게 오해를 받아서 그러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됐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건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송호창 의원** 노무현 대통령 건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훨씬 죄질이 나쁘고 훨씬 더 조직적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의 죄질이, 범법 사실이 훨씬 더 무겁다는 겁니다.

선관위 경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고 죄송하다는 얘기도 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송호창 의원** 그래서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특별한 말씀은 안 했습니다.

○**송호창 의원** 아무런 조치……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총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송호창 의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송호창 의원** 그러니까 결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냥 가만히 계신 거네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게 제가 알기에는 ‘기관 주의’ 형태로 생각하는데요, 뭐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송호창 의원**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한테서?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아니, 이번에 선관위로부터 ‘기관 주의’를 받았습니다.

○**송호창 의원** 아니, 그것은 4월 6일 날 경고를 받은 거고……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송호창 의원** 이번에 따로 또 주의를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아닙니다. 경고……

○**송호창 의원** 그러면 ‘주의’는 뭡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고’가 아니고 ‘주의’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호창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대통령 선거 때까지 복지 TF 팀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언론 발표를 한 적이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송호창 의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송호창 의원** 그것은 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복지 TF가 처음에 출범할 때 목적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다양한 복지정책, 새로운 요구에 대한 재원 파악……

○**송호창 의원** 죄송합니다. 아까 그 말씀……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두 번째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복지정책의 착근,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복지제도로의 정부 내에서의 자생적인 전환 내지 발전,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세 가지 목적을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송호창 의원**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상보육 같은 것에 대해서 하고 있고……

○**송호창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팀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겁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송호창 의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분석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정부로서도 선거 이후의 또 재정소요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되 그 결과는 발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송호창 의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아마……

○**송호창 의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나머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은 국가재정 부담 문제나 다른 목적을 얘기하셨지만 중앙선관위는 그 어떤 이유이든 간에, 목적이 어떤 데에 있든지 간에 여전히 헌법 기관인 선관위는 경고를 한 것이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미 발표를 한 겁니다.

선관위의 지적처럼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TF팀을 해체할 그런 용의는 없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TF팀은 계속하면서……

○**송호창 의원** 계속할 거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대신에 바깥으로 그 분석 내용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창 의원** 알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받은 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복지 TF팀의 교육문화여성정책관을 참여시킨 적이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실무자들이 누가 참여했는지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송호창 의원** 총리실에서도 이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총리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 TF팀에 참여하도록 유지할 계획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우리가 많은 TF를 운영하는데 TF 구성·운영의 목적이 있습니다.

○**송호창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문제가 된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경고를 받은 이 TF팀을 계속 유지하실 건지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TF 구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검토된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게 외부에 유출된 것이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송호창 의원** 그러면 계속 유지를 하시겠냐?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호창 의원** 알겠습니다.

국무위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무총리로서 크나큰 실책이고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주통합당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한 사유 중의 한 가지로 더 추가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선거법 위반을 한 국무위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그런 국무총리로 기록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총리의 해임과 더불어서 박재완 장관이 더 이상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하는 이런 범법 행위를 중단하고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정의 문제는 지금까지의 범법의 문제라기보다도 앞으로 대통령 선거기간에 우리 행정 각 부가 얼마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예의 주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살아 있는 그런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창희** 송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퇴장)

**2. 국무총리(김황식) 해임건의안(박지원 의원 외 126인 발의)**

(21시22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김황식) 해임건의안을 추가 상정합니다.

**○ 의사진행의 건**

○**의장 강창희**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

합니다.

○**이철우 의원**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와서는 나라를 걱정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반대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7월 17일 날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밀실행정이 국회 무시 등을 이유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7월 18일 날 10시경 본회의에 보고되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므로 오늘이 그 표결이 되는 거 같습니다.

민주당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낸 것은 이번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잘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또 민주당이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일로 국무총리를 해임하면 국무총리가 과연 버티 낼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거대 야권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 세력이 힘을 한번 과시해 보고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참 말하기가 미안합니다마는 방탄국회를 하기 위한 빌미를 만드는 게 아니냐……

(장내 소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좀 잘 들어 주십시오.

(장내 소란)

그런데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급기야 오늘은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교섭단체 간 합의를 해 놓고도, 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다 출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전 대정부질문을 거부해서, 또 국회의장님은 여기에, 새누리당이 보기에는 굴복하듯이 바로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서 상정해 온 바에 비추면 국회의장님의 직권상정은 여야 교섭단체 합의 없이 한 것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총리 해임결의안에 대해서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또 다가오는 대

통령선거 등 국가의 중차대한 시기와 또 혹시 걱정되는 방탄국회 이런 목적에 의해서 결의안이 실시된다면 이번 결의안은, 해임결의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국가를 위하고 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잘 생각하셔서 오늘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김재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김재운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누구를 그만두라고 할 때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설령 당이 해임을 촉구한다 결정했어도 저는 간사회의를 할 때 해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야말로 대통령 권력을 제어하고 나라가 올바르게 가도록 국민에게 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맞는 것을 맞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부여한 권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인 한일 군사보호협정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김황식 국무총리는

첫째,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국민을 속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둘째,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중차대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좌충우돌하여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되었고 국격을 떨어뜨린 데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셋째,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중차대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상정되는지도 모를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넷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매우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고 국무

회의 당일 총리도 모른 채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데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안건이 일상적 안건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처리하는 데 대한 총리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섯째, 이렇게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폐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따로 놓고 있습니다.

이 협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 및 동북아 국제정세,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판단의 오류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일본의 과거사 왜곡, 독도 침탈 시도, 핵무장 추진 등 일본이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듯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는 일본 우익에게 힘을 실어 주는 협약을 국가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 총리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섯째, 헌법 제86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 각 부를 통할해야 합니다.

헌법 제86조에 규정한 바대로 김황식 총리는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지 않았으며 행정 각 부를 효율적으로 통할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중대한 정치적 과오, 부당한 처리절차를 저지르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국무총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마땅히 그 직을 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판단을 제대로 못하면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조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큰 사안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황식 총리라도 정치적으로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반드시 가결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출신 민주통합당 정청래입니다.

국무총리(김황식)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63조 및 국회법 제11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김황식) 해임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헌법 제86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2012년 6월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 처리하였습니다. 사전에 대통령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고 국민 여론과 국회 내의 심도 있는 논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차관회의도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처리 사실조차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동북아의 국제정세,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등 정무적 판단에도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규정한 바대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지 않았으며 행정 각 부를 효율적으로 통할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6월 29일 협정 서명을 불과 한 시간 앞둔 상황에서 국민적 저항과 정치권의 반대로 인해 협정 서명을 연기함으로써 최악의 외교적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셋째,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사실상 인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 130개 조항, 그것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우리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군대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평화헌법에도 위배가 되며, 정보보호

## 2. 국무총리(김황식) 해임건의안(박지원 의원 외 126인 발의)(계속)

(21시32분)

협정 체결로 인해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이것이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여 동북아의 신냉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평화·번영이라는 우리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행위가 되는 동시에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독도 영유권 주장, 원자력법 개정을 통한 핵무장 시도, 정신대 할머니, 일제 강제 징용자 배상 문제 등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국민 정서와 법감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과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국내적 갈등과 외교적 망신을 초래한 정부의 행태는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하며 그 책임선상에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외교적 참사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은 단 2명, 청와대 김태효 그리고 외교통상부의 동북아국장, 2명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말 그대로 국가의 업무를 통할 관리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하급 공무원 2명을 이 외교적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나게 한 김황식 총리,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은 참으로 염치가 없을 것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외유 기간 동안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총괄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통과시킨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 성난 국민의 마음을 달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는 국가안보와 상호원조에 해당하는 것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이 하는 말은 ‘협정이기 때문에 굳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어서 국회의 인준 절차를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한미자유무역협정, 분명히 협정입니다. 왜 그렇게 날치기를 해서라도 국회의 인준을 받으려고 그렇게도 노력하셨습니까?

이것은 협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우롱하는 그런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미 교역량보다 대중 교역량이 이미 2배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30분 먼저 그 정보를 알려준 것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우리가 얻을 정보가 없습니다.

24개국과 군사정보협정을 이미 맺었다고 정부는 항변합니다. 그러나 한미, 한·호주정보보호협정에 보면 국회의원이 일상적으로 넘어간 정보를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유독 한일 정보보호협정만 권한 있는 당국자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던 말입니까?

국무총리도 외교통상부장관도 국방부장관도 권한 있는 당국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넘어간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가 높이 솟아 있는 이 상태에서 권한 있는 당국자가 그 정보를 넘겼을 때 장관도 모르고 주무부처도 몰랐을 때 그리고 국회도 몰랐을 때 그 초래하게 될 엄청난 비극을 상상해 보십시오.

일본 평화헌법은 군사력 불소지를 명명백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자위대를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같은 지위로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대화 파트너로 일본의 자위대를 격상시켜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안설명 해야 될 것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께서 대정부질문 모두발언에서 한 우리 독립운동가,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설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위안부소녀상에 일본 국적의 일본인이 와서 말뚝을 박아 뺐습니다. 그리고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사람은 이 말뚝을 모형을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한국 돈 4만 원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감정을 생각하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를 사과하지 않고 아직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망언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 주십시오. 지금도 피땀혀 절규하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그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안설명 해야 될 것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인터넷에는 위안부소녀상이 비 맞는 것이 마음 아파서 우산을 씌우고 있는 경위의 모습이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지하세요, 제지」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께서 일갈하셨듯이 일본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임건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장내 소란)

**○의장 강창희**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그리고 국무총리 해임안은 헌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강은희 의원, 민병주 의원, 염동열 의원, 함진규 의원, 김기식 의원, 김민기 의원, 박완주 의원, 이원욱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한공식**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 안에 국무총리(김황식) 해임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가’로, 반대하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

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21시46분 투표개시)

**○의장 강창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21시58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총 138매로서 현재 투표하신 의원 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수는 집계하지 않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소수 야당의 설움이네요」 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산회)

**【서면답변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유승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한진중공업의 약속 이행사항, 정부대책

□합의사항 이행 상황

①합의서 체결일(2011. 11. 10)로부터 1년 내 재취업(해고자 94명)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음

②정리해고자 1인당 생계비 2000만원 지급(1000만원 지급 후 3회 분할)

↳2011. 12월~2012. 7월 1600만원 지급(400만원은 2012. 11월 지급 예정)

④노사 간 형사 고소·고발 쌍방 취하, 민사상 손해배상 최소화

↳노사 간 고소·고발 및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취하

-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한진중공업지회: 158억 9300만원, 민주노총 부산본부: 1억 100만원)은 진

행 중

□조치계획

○노사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출석 의원(28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광진	김근태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노회찬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립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균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진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중학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170인)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김경협	김광립	김광진
김근태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동완	김동철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장실
김재경	김재윤	김정훈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형태	김회선	김희정	나성린	노응래	노철래	노회찬	도종환
남인순	노영민	노홍재	노철래	류성결	문병호	문재인	문희상
류성걸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박기춘	박남춘	박덕흠	박민수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지원
박인숙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손인춘	송영근	신경민	신동우	설훈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심재철	안덕수	안종범	안홍준	신동우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심윤조	심재권	안규백	안덕수
우윤근	원유철	유승우	유일호	안민석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윤영석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호중
이상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우현	이윤석	이자스민	이재균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재영	李宰榮	이주영	이찬열	이상규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채익	이철우	이한구	이한성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이용섭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장병완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이인영	이재균	이재영	李宰榮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이종걸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조현룡	진영	진선미	진성준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장병완	장하나	진병헌	전순옥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문헌
홍문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진후
홍지만	황주홍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산회 시 재석 의원(202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노응래	노철래	노회찬	도종환
강창일	강창희	고희선	길정우	류성결	문병호	문재인	문희상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미희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김민기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지원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재연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김재윤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학용	설훈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김현숙	김형태	남인순	노영민	신동우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청가 의원(4인)

김윤덕	박대동	주호영	최재성
-----	-----	-----	-----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윤원중
입법차장	김성곤
의사국장	한공식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김 황 식
기획재정부장관	박 재 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 규 용
지식경제부장관	홍 석 우
국토해양부장관	권 도 엽
특임장관	고 흥 길

○출석 정부위원

공정거래위원장	김 동 수
금융위원장	김 석 동

【보고사항】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정몽준	기획재정	보건복지	새누리당	2012. 7. 19
이한구	보건복지	기획재정		

○의안 제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2. 7. 19 김우남 · 최규성 · 우윤근 · 김재윤 · 김승남 · 양승조 · 이춘석 · 김준진 · 신성범 · 김동철 · 박민수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12. 7. 19 김승남 · 안규백 · 김재원 · 강기정 · 신성범 · 김용익 · 김재윤 · 배기운 · 신장용 · 김영록 · 김관영 · 김우남 · 정성호 · 장병완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0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2. 7. 19 김영주 · 김성주 · 진성준 · 조성식 · 이춘석 · 홍종학 · 배기운 · 전정희 · 장병완 · 유대운 · 박민수 · 문병호 · 김동철 · 원혜영 · 오제세 · 이상직 · 이미경 · 김기식 의원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2. 7. 19 윤호중 · 신장용 · 문병호 · 최민희 · 이상민 · 배기운 · 정성호 · 윤후덕 · 김기준 · 이미경 · 김재윤 · 강창일 의원 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2. 7. 19 윤호중 · 신장용 · 문병호 · 최민희 · 이상민 · 배기운 · 정성호 · 윤후덕 · 김기준 · 이미경 · 김재윤 · 강창일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2. 7. 19 강기운 · 이낙연 · 이종진 · 박인숙 · 조명철 · 김성찬 · 신성범 · 권성동 · 김태원 · 박성호 의원 발의)

7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12. 7. 19 김영우 · 정희수 · 유승민 · 김을동 · 임내현 · 김성찬 · 황진하 · 김태원 · 한기호 · 안규백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7. 19 정부 제출)

이상 2건 7월 2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7. 19 정부 제출)

7월 20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재외국민보호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2. 7. 19 하태경 · 유승민 · 정병국 · 김태환 · 이주영 · 정갑윤 · 김상민 · 김성찬 · 김을동 · 이헌승 · 김태흠 · 이한구 · 장윤석 · 김재원 · 김근태 · 정의화 · 유기준 · 심재철 · 김성태 · 이종훈 · 박인숙 · 강은희 · 황진하 · 심윤조 · 김종훈 · 조명철 의원 발의)

7월 2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정책연구용역관리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2. 7. 19 유기준 · 유승우 · 金永柱 · 류지영 · 정성호 · 서용교 · 김성찬 · 박인숙 · 김동철 · 김성태 · 김도읍 · 김한표 · 김종훈 의원 발의)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2. 7. 19 홍영표 · 강동원 · 김경협 · 김미희 · 김민기 · 김선동 · 김재연 · 김제남 · 김현 · 노회찬 · 박남춘 · 박원석 · 백재현 · 서기호 · 심상정 · 오병윤 · 유대운 · 은수미 · 이상규 · 이석기 · 이석현 · 이재오 · 이찬열 · 임수경 · 장하나 · 정진후 · 진선미 · 한명숙 · 한정애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7. 19 정부 제출)

7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청원 제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 허용에 관한**

**청원**

(2012. 7. 19 경기 평택시 장안동 240번지 채종윤  
으로부터 원유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7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